

2026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정연구
지구가능발전목표(GDGs)기반 인천 인권 실현 연구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용역

2026. 5.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기반 인천시민참여연구회

■ 소속의원



유승분 대표의원



신영희 의원



김대영 의원



장성숙 의원

■ 연구 배경 및 목적

활동기간

- 2026.1.1.~2026.5.31.

연구목적

- SDGs 기반 인천시 시민참여 지표 분석 및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주요내용

- SDGs와 인천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표를 기반으로 시민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참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와 개선방향을 도출함. 국내외 SDGs 기반 시민참여·거버넌스 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시에 적용 가능한 참여모델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요약	i
I. 개관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3
3. 연구내용	4
4. 연구방법	4
I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	9
2. 유엔SDGs 국제협력체제 현황과 시사점	10
3. 유엔SDGs의 국내 이행 현황과 시사점	11
4. 2030년 이후 SDGs 체제 전망	13
I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1. 의회의 역할 근거 및 국제 동향	19
2.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국제 가이드라인	20
3. 해외 사례	30
IV.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49
2. 인천SDGs 법제도 및 이행점검체계와 시사점	56
3. 인천광역시 주요 현안 분석	61
V. 인천시의회 SDGs 이행체계 현황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체계 현황 및 시사점	67
2. 인천광역시 SDGs 이행 관련 입법 현황 및 시사점	69
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 연구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체계 현황	71

목 차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안

1. 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방안 75
2. 의회 기능별 역할 방안 76
3. 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안) 78

VII. 부록

1. 참고문헌 및 자료 83
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유엔SDGs 연계 현황 86
3.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자체 역량 평가 질문 예시 89
4. 유엔SDGs와 '인천SDGs 2026' 연계 현황표 94
5.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개 원칙 기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분석
..... 95
6.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개 원칙 기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
영조례, 운영규정, 인사규정, 복무관리 규정 분석 내용 96
7. '인천SDGs 2021'과 제9대 인천시의회 공약 연계 목록 97
8. 표적집단 면접 질문지 102

I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표 II-1〉 ‘의제21’-‘새천년개발목표(MDGs)’-‘유엔SDGs’ 체제의 차이 11

〈표 II-2〉 한국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체계 현황 및 시사점 12

〈표 II-3〉 2017-2025 대한민국의 유엔SDGs 이행현황 13

I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표 III-1〉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4대 핵심 기능별 주요 역할 20

〈표 III-2〉 SDGs 이행 자체 역량 평가 실시 전 사전 확인 사항 21

〈표 III-3〉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자체 역량 평가 질문 예시 22

〈표 III-4〉 SDGs 기반 입법 전 심사 절차(6단계) 24

〈표 III-5〉 SDGs 기반 입법 후 심사 절차(6단계) 25

〈표 III-6〉 가상 ‘기후 회복력 법안’의 SDGs 기반 입법 심사 사례 연구 26

〈표 III-7〉 SDGs 기반 예산 심의 방안 27

IV.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표 IV-1〉 유엔SDG 5대 분야별 169개 세부목표 분류 현황 49

〈표 IV-2〉 5대 분야별 ‘인천 SDG 2026’과 연계된 유엔 SDGs 세부목표 현황 51

〈표 IV-3〉 ‘인천SDGs 2021’ 4대 분야별 41개 지표 개선 현황 52

〈표 IV-4〉 ‘인천SDGs 2021’ 4대 분야별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지표 현황 52

〈표 IV-5〉 ‘인천SDG 2021’ ‘미흡’ 지표의 ‘인천SDGs 2026’ 반영 현황 53

〈표 IV-6〉 ‘인천SDGs 2026’ 관련 유엔 SDGs 현황과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현황 54

〈표 IV-7〉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대 기본 원칙 56

〈표 IV-8〉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 기준 인천 SDGs 이행 점검체계 비교 57

〈표 IV-9〉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개 원칙 기준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 현황 58

〈표 IV-10〉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사항 59

〈표 IV-11〉 ‘인천SDGs 2021’ 30개 세부목표 기준 제9대 인천시의회 196개 공약 연계 현황 62

〈표 IV-12〉 공약과 연계되지 않은 ‘인천SDGs 2021’ 세부목표 현황 63

그림 차례

I. 개관

[그림 Ⅰ-1] 연구 분석 체계	4
-------------------------	---

I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그림 Ⅱ-1]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유엔SDGs)	9
---------------------------------------	---

[그림 Ⅱ-2] 2025 유엔SDGs 이행현황: 대한민국	13
---------------------------------------	----

[그림 Ⅱ-3] 유엔SDGs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연계 현황(개)	15
--	----

I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그림 Ⅲ-1] 입법 전 과정에 걸친 SDG 기반 입법 심사	23
---	----

[그림 Ⅲ-2] 의회의 SDGs 이행 기반 구축 5대 핵심 요소	29
---	----

IV.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그림 Ⅳ-1] ‘인천SDGs 2026’와 유엔SDGs 연계 현황	51
--	----

V.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체계 현황

[그림 Ⅴ-1] 인천광역시의회 구성도	67
----------------------------	----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안

[그림 Ⅵ-1] SDGs 기반 입법 이전 6단계 심사 절차	77
--	----

[그림 Ⅵ-2] SDGs 기반 입법 이후 6단계 심사 절차	77
--	----

요약

I. 개관

-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도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인천SDG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의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UN, IPU 등)의 지침, 해외 의회 사례, 인천시 조례 및 법정 계획, 그리고 제9대 인천시의원 공약 연계 분석과 표적 집단 인터뷰(FGI)를 종합하여 다층적인 이행 체계를 분석함.

I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 유엔SDGs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발전권(Rights to Development)'을 보장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례적 이행점검체계(고위급 정치포럼, 자발적 국가보고서 등)를 갖춘 범지구적 정책 실행 체계임.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지침에 따르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른 거버넌스는 부처 포괄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가 위원회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집행력과 포용성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보임.
- 2025년 기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수준은 167개국 중 34위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으며, 특히 기후행동(SDG 13) 및 온실가스, 생태계 보호 등 환경 부문의 성과가 매우 저조함.
- 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16개가 SDGs와 연계되어 있으나, 평화·제도 거버넌스(SDG 16)와 경제·산업(SDG 8, 9) 부문에 편중되어 있으며 취약한 환경 부문 관련 과제는 가장 적어 불균형이 심각함.
- 현재 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이 개선되기가 불투명함.

III.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 세계의회연맹(IPU)은 SDGs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국 의회에 입법·예산·감독·대의 등 4대 핵심 기능을 통해 정부가 합의된 목표에 책임지도록 강제하고

정책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권고함.

- SDGs 기반 입법 심사(SDG-informed Legislative Scrutiny): 모든 법안 발의 및 제·개정 시 해당 법안이 SDGs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6단계 사전 심사와, 법안 시행 후 목표 달성 여부를 추적하는 6단계 사후 심사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함.
- SDGs 기반 예산 심의 방안: 한정된 국가 재원이 지속가능성 목표와 취약계층에 우선 배분되도록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안에 SDGs 지표를 반영하며, 정부 제출 예산 문서에 SDGs 기여도를 서술형으로 포함하도록 감독해야 함.
- 해외 선도 사례: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 등 의회 내 전담 기구를 상설화하여 정부 조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녹색 예산 도입과 오스트리아의 예산별 SDGs 영향 분석 등 실질적인 감시가 활발함.

IV.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 국제-지방 정책 통합성 부족: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6-2045)'에 포함된 세부목표 중 유엔SDGs와 연계되는 비율은 38.3%에 불과하여 국제 정책 규범과의 정책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인천SDGs 이행의 일관성 및 환경 분야 미흡: 이전 계획인 '제2차 기본전략(2021-2025)' 평가 결과, 환경 분야의 이행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이 시급한 지표 21개 중 차기 계획인 '제3차 기본전략'에 반영된 것은 단 3개뿐이어서 정책의 연속성이 취약함.
- 인천시 거버넌스의 포용성 취약: 조례 기반의 거버넌스는 구축되었으나 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시 여성, 청년, 이주민, 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과 세대 간 형평성을 담보하는 '차별금지' 및 '포용성' 명문화 규정이 부족함.
- 시민 수요와 장기 목표의 괴리: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선거공약 196개를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48.5%)이 경제 개발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된 반면, 기후위기 대응이나 신재생에너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성 필수 의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공약은 전무함.

V.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체계 현황

- 전담 추진 조직 및 인력 부재: 현재 인천광역시의회에는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거나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할 전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없으며, 이를 보좌할 전문위원 등 지원 인력도 전무한 상태임.
- 법제도 내 SDGs 평가 도구 미비: 조례 등 입법 활동은 간헐적으로 존재하나,

의회 의 일상적인 입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인천SDGs 지표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의원 및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 미흡: 정책 개발을 주도해야 할 의원 연구단체나 국회 및 지방의정연구소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분야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실적 전무하며, 정기적인 교육이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해당 의제가 배제되어 있음.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안

- 의회 내 상설 전담 기구 설치: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 또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의회 내에 소속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사무직원을 배정하여 추진 컨트롤타워를 확립해야 함.
- 조례 및 의사규칙 정비: 의사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조례안 및 예산안 상정 시 'SDG 영향 분석(SDG Impact Analysis)'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취약계층 위원 참여와 이행 현황 정보 공개 의무를 명시해야 함.
- 입법 및 예산 기능 고도화: 모든 제·개정 법안에 대해 세계의회연맹이 권고한 6단계 사전/사후 입법 심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성인지 예산 및 온실가스 감축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예산이 SDGs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후 조정해야 함.
- 대외 및 네트워크 기능 활성화: 행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평가 보고서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문서를 발표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가칭)인천SDGs 의정 포럼' 상설화 및 '지속가능발전 광역시·도의회 네트워크' 적극 참여로 대외 협력을 확대해야 함.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일명 유엔SDGs)’는 친환경 경제성장 및 사회형평성을 위한 범 지구적인 경제·사회·환경 정책 조정 및 실행 체계임.
- 유엔은 SDGs 이행에서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변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유엔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제도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임(매년 고위급정치포럼 개최 시 ‘SDGs 의회 총회’ 개최).
- ‘의회’는 입법·예산·감독·대의 기능을 통해 공공 행정을 견인하고, 이행을 촉진시키는 주요 주체로서 의회의 SDGs 이행 역량이 곧 행정 이행력을 담보하는 원동력임.
-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11월에는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우선과제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추진체계 강화가 필요함.
-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회 내 적절한 대응 조직 및 체계과 더불어 구체적인 역할 과제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 체계 구축 방안 도출
 -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인천SDGs) 이행 촉진을 위한 시의회 역할 과제 도출

2.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글로벌(UN), 국가(대한민국), 지방정부(인천광역시) 차원의 다층적 이행 체계
- 시간적 범위
 - 현황 분석: 2015년(UN SDGs 채택)~2025년 현재 이행 현황
 - 미래 전망: 2026년~2030년(목표 달성 시기) 및 Post-2030(2031년 이후) 전망
- 내용적 범위
 - ①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조사·분석
 - ②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마련
 - ③ 지방의회의 입법·예산·감독·대의 기능을 통한 SDGs 실질적 이행 방안 도출

3.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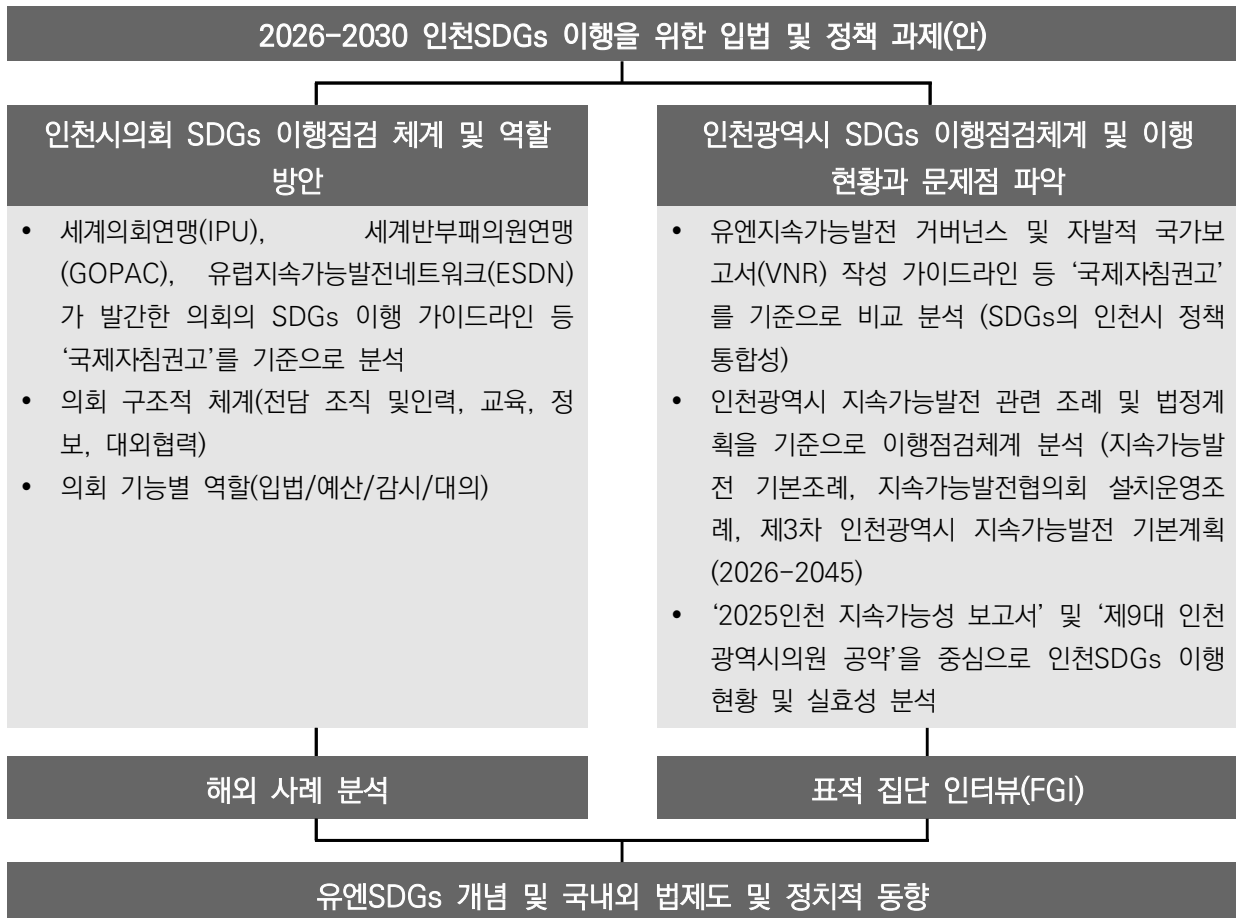
-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조사·분석
-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및 해외 사례 조사
-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조사·분석
- 표적 집단 인터뷰(FGI)를 통한 인천SDGs 이행 현황의 실효성 검증
-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역량 강화 및 실행 체계 현황 분석
-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안

4. 연구방법

1) 분석체계 및 전략

- 국제 지침권고 기준(유엔SDGs, 세계의회의연맹 등) 인천SDGs 법제도 및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SDGs의 인천시정 통합성 평가와 시의회 역할 과제를 도출함.
- FGI 및 제9대 시의원 공약 연계 분석을 통해 인천SDGs 정책 및 이행점검체계 실효성을 평가하고 시의회 역할 과제를 도출함.

[그림 1-1] 연구 분석 체계



2) 문헌 조사분석

- 선행 연구 자료 조사·분석
 - 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역사 및 동향(환경정치, 개발협력, 인권 분야)
 -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국제 합의문(의제21, 2030의제 등)
 -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 법령 및 조례(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조례)
 - 국가 및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국가계획 및 공약
- 사례 조사·분석
 - 유엔 및 세계의회연맹(IPU), 유럽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ESDN)의 ‘SDGs 이행 의회 역할 핸드북’ 주요 내용
 - SDGs 기반 의회 활동 사례(독일, 핀란드, 프랑스, 튀니지, 인도네시아 등)
 - 유엔SDGs 자발적 지방정부 보고서(VLR)(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등)

3) 표적 집단 인터뷰(FGI)

- 목적 : ▲ 문헌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현장 전문가 교차 검증을 통한 분석 신뢰성 제고, ▲인천SDGs 목표, 지표, 이행점검체계,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
- 대상 : 인천시의원 1, 담당부서 공무원 1, 민관협치기구 1, 시민사회단체 1 등 4명
- 기간 : 2~3주
- 방법 : 대면 또는 온라인, 서면 설문
- 내용 : 인천SDGs 이행현황, 법제도 및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입법/예산 중심) 등



II. 국내외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

- ‘지속가능발전’이란, 1987년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과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균형 발전’을 의미함. 즉, 빈곤, 불평등과 환경파괴의 악순환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사회안정·환경보호의 조화로운 추진을 제안하는 ‘정치적’ 개념임.¹⁾
- 유엔 체계에서의 지속가능발전 역사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21(Agenda 21)’ 채택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됨.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에서 ‘의제21’ 체계와 국제개발협력 의제인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 체계²⁾를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SDGs)’가 채택됨.

[그림 II-1]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유엔SDGs)³⁾



총 5개 부문,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4개 지표로 구성:
①경제, ②사회, ③환경,
④평화 및 제도,
⑤이행수단 및 협력

-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조약이 아니라, 기존의 흩어져 있던 인권, 환경 등 국제 규범들을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서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고안된 범지구적 정책 실행 체계임.
- 한편, 유엔SDGs의 이행 대원칙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로, 인권 관점이 유엔SDGs의 내용과 이행점검체계 전반에 관통하고 있음. 이는 유엔의 또 다른 핵심 국제협력 의제인 ‘인권’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법적 권리’로서 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됨.
- 유엔SDGs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인권 개념은 198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발전권(Right to Development)’으로, ‘모든 인간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그 성과를 향유할 권리’를 의미함. 정책 계획·실

1) 김판석·사득환 (1999)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4호, pp. 71-88

2)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00년 유엔이 채택한 ‘빈곤퇴치’ 등 8개 목표로, 선진국의 개도국 원조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체계

3) UN SDGs portal: <https://sdgs.un.org/>

행·평가 전 과정에서 인권 원칙(참여, 투명성, 책임성, 비차별 등)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임.⁴⁾

- 발전권은 ‘개발’을 ‘시혜적 차원(Needs-based)’에서 ‘권리 실현(Rights-based)’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것에 의미⁵⁾가 있으며, 이후 유엔의 ‘인권 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Leaving no one behind)’ 대원칙으로 반영됨.⁶⁾

2. 유엔SDGs 국제협력체제 현황과 시사점

- 유엔SDGs는 유엔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가 직접 주관하여 유엔 기구 및 국제기구들을 총괄하는 통합 조정 거버넌스를 강화함.⁷⁾
-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원국 및 국제기구 중심의 유엔 거버넌스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집단 참여 체계를 구축함.(2024.12월 기준, 14개 이해관계집단 구성)⁸⁾
 - ①여성, ②아동/청소년, ③노인, ④장애인, ⑤원주민, ⑥농민, ⑦노동자 및 노조, ⑧기업 및 산업계, ⑨시민단체, ⑩지방정부, ⑪과학기술계, ⑫학계 및 교육계, ⑬자원봉사자, ⑭LGBTI
- 매년 경제사회이사회 주최 고위급 정치포럼, 4년 마다 유엔 총회 주최 SDGs 정상회의 개최, 최소 2회 이상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제출, 자발적 이해관계자 보고서/입장문서 제출, VNR 동료 검토 및 이해관계자 질의 등 점검·보고 체계를 통해 회원국, 국제기구, 다양한 이해관계집단들의 SDGs 이행을 촉진하고, 유엔 SDGs 전용 정보포털을 통해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전권’을 보장함.
- ‘의제21’, ‘새천년개발목표(MDGs)’, ‘유엔SDGs’의 핵심 내용 및 이행점검 체계의 차이는 <표 II-1>과 같음.
- ‘의제21’체제 및 ‘MDGs’체제와 대비하여, SDGs체제는 이행점검이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투명하게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발적 국가보고서, 이해관계자 입장문서 등 참여 주체의 이행 책무성이 강화되어 거버넌스 구조가 진일보함.
- 다만, 여전히 참여 주체의 자발성에 기반 하다 보니, 이행 강제력이 미흡하여 2030년까지 SDGs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임.

4) 이주영, (2017),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제2호, pp.33-57

5) 백범석·박진아, (2020), ‘발전, 인권 그리고 국제법-발전권의 국제적 논의 전개와 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통권 제157호), pp.59-92

6) UNOHCHR, <https://www.ohchr.org/en/good-governance/about-good-governance>

7)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8) UN SDGs Portal, 이해관계자 참여, <https://hlpf.un.org/mgos>

〈표 II-1〉 ‘의제21’-‘새천년개발목표(MDGs)’-‘유엔SDGs’ 체제의 차이

구분	1992-2012 의제21 체제	2000-2015 MDGs 체제	2015-2030 SDGs 체제
핵심가치	지구환경 보호	절대 빈곤 퇴치	인권 기반 경제·사회·환경 통합적 지속가능성
의제	경제·사회·환경 3개 분야 의제, 주요그룹 역할, 이행수단	빈곤퇴치·사회개발 중심 8개 목표 및 21개 세부목표	경제·사회·환경·평화제도·이행수단 5개 분야 17개 목표 및 163개 세부목표
적용대상	전 세계(실천은 각국 재량)	개도국	모든 국가 및 이해관계자
형성주체	정부간 협상	유엔 및 전문가(하향식)	국가정부, 이해관계자(상향식)
주요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회원국 전체 9개 주요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부 국제기구(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회원국 전체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그룹
담당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사무처 직접 실무 관할)
이행점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위원회 보고서 제출 공론장: 10년(2002,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총회(5년마다) 유엔사무총장 보고(매년) 국가별 MDGs 보고서 (National MDG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총회(4년마다) 고위급 정치포럼(매년) 글로벌지속가능성 보고서(4년) 지속가능발전 이행현황(매년) 자발적국가보고서(최소 2회 이상) 자발적 이해관계자 입장문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조정 메카니즘 (MGoS Coordination Mechanism)
지표	없음	60개(유엔통계위원회 관리)	243개 (유엔통계위원회 관리)
정보공개	없음	MDGs 지표 데이터베이스	유엔SDGs포털
강제수단	없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검토(Peer-Review) 이해관계자그룹 질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과 환경 문제 최초 연계 국가정부 이외 주요 행동주체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원조를 통한 개도국의 빈곤퇴치 목표·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이행 및 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성 강화 행동주체의 보편성 확보 인권 관점 강화 이행 강제수단 강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vs개발 대립 양상 비구속적, 국가 재량 의존 느슨한 이행점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과 개도국간 시혜적 관계 및 대립 비구속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구속적·자발성 의존 시민 감시 기능 제약 이행재원 확보 불투명

3. 유엔SDGs의 국내 이행 현황과 시사점

- 한국에서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추진 과제인 ‘지방의제21’이 처음 도입된 것이 시초임.⁹⁾
- 국가차원에서는 2000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 이후 환경부 소관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추진되다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가 이행 거버넌스가 구축됨.
- 2015년 유엔SDGs가 채택되면서 ‘환경’ 중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국제개발협력’으로 확장되기는 했으나,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핵심 주

9) 문태훈, (2002), '한국의 지방의제21에 대한 평가', *지방의제21과 WSSD 전국포럼*, 2022.7.12~13, 자료집

- 체, 법제도 및 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예를 들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을 ‘국가SDGs’와 연계하거나 인권 침해 및 구제 관련한 평가, 정책 개발연구 등은 매우 미진한 상황임¹⁰⁾.
 -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체계 현황과 시사점은 아래 <표 II-2>과 같음.¹¹⁾

<표 II-2> 한국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체계 현황 및 시사점

구분	유엔 이행점검체계	한국 이행점검체계(현행)	시사점
법적 근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지속가능발전기본법(2022)(17개 목표 119개 세부목표)	
담당 기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총회 직속) (담당부서: 유엔 경제사회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집행력 취약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회원국 전체 •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 그룹(13개) 	정부 주요 부처장, 17개 광역 지속가능발전위원장, SDGs 전문가 60명 이내 (누락: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구성원의 포괄성, 포용성 제한
이행 점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총회(4년마다)2019, 2023, 2027) • 공론장: 고위급 정치포럼(매년) • 글로벌지속가능성 보고서(4년) • 지속가능발전 이행현황(매년) • 자발적국가보고서(최소 2회 이상) • 자발적 이해관계자 입장문서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계획 수립(5년마다) • SDGs추진점검보고(2년마다) •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2년마다) • 국회보고 • 이해관계자 공론장 운영(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적 속의 공론체계 •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미비
지표	243개 (유엔통계위원회 관리)	236개 (담당부서 미정)	
정보 공개	유엔SDGs포털 https://sdgs.un.org/	SD 정보망 구축 https://ncsd.go.kr/	속의공론 및 참여체계 정보 부재
강제 수단	동료검토(Peer-Review), 이해관계자그룹 질의	속의공론장을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 및 반영 결과 공표 의무	정책 이행 효과 및 참여 효능감 높은 편
재원	기금 조성(ODA, 기업재단 등 출연금 등)	없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그쳐 집행력이 취약하다 점, 국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인권위원회 등 SDGs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처가 누락되어 범 부처 포괄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못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와 공론장 운영이 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대원칙 및 참여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한편, 2025년 현재,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점수는 78.1점으로 167개 국가 중 34위를 차지함.¹²⁾ 2019년 18위 이후 계속 하락함(<표 II-3>).

10) 2025년 기준,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 정부 대상 총 1,753개 권고 중 1,093개 권고(62%)가 유엔SDGs와 연계되어 있음에도 ‘국가SDGs’ 수립 시 연계 부재.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SDG-Human Rights Data Explorer, <https://sdgdata.humanrights.dk/en/sdg/report/country/954>

11) 윤경효 (2025) ‘2030 유엔SDGs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2025 한국여성정의 인천정치학교, 2025.7.4. 자료집

12) Sachs, J.D., Lafortune, G., Fuller, G., Iablouovski, G. (2025).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수준이 미진한 가운데, 특히, 기후(SDG 13), 해양 및 육상 생태보호(SDG 14, 15) 등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그림 II-2).

[그림 II-2] 2025 유엔SDGs 이행현황: 대한민국



* 출처: Sachs, J.D. et al. (2025)

<표 II-3> 2017-2025 대한민국의 유엔SDGs 이행현황

연도	순위/국가 수	취약한 목표	악화 추세
2017년	31위/157개국	5, 8, 13, 15	-
2018년	19위/156개국	5, 13, 17	13, 15
2019년	18위/162개국	5, 13, 17	13, 15
2020년	20위/166개국	5, 10, 13, 17	15
2021년	28위/165개국	5, 10, 13, 14, 15, 17	15
2022년	27위/163개국	5, 10, 13, 14, 15, 17	14
2023년	31위/166개국	5, 12, 14, 15, 17	-
2024년	33위/167개국	5, 13, 14, 15, 17	-
2025년	34위/167개국	13, 14, 15, 17	-

* SDG 5(성평등), SDG 8(경제성장 및 노동), SDG 10(불평등), SDG 12(자원순환), SDG 13(기후행동), SDG 14(해양생태), SDG 15(육상생태), SDG 17(이행수단 및 협력)

* SDSN의 발간 보고서 종합 정리

4. 2030년 이후 SDGs 체제 전망

- 2024년 유엔 미래정상회의에서 ‘미래협약(Pact for the Future)’이 채택되었는데, 5대 핵심 의제로 ▲SDGs 이행 강화, ▲국제 평화·안보 강화,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환, ▲미래세대 참여 강화, ▲유엔 거버넌스 개혁이 제시됨. 2030년 이후 ‘디지털/AI’와 ‘미래세대’ 권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국제규범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2024년 기후변화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 등 주요 환경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행 재원 마련 관련하여 중요한 결의가 있었는데, 보조금보다 민간투자, 시장기반 금융지원 등 민간 재원 조성을 강조한 ‘기후재원’과 ‘생물다양성 칼리기금13)’ 조성이 합의됨. 민간 재원 비중이 커지면서 2030년 이후 글로벌 거버

2030 and Mid-Century.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5. Paris: SDSN, Dublin: Dublin University Press. DOI: <https://doi.org/10.25546/111909>

13) 칼리기금(Cali Fund)이란, 생명체 유전정보 활용 기업의 자발적 납부금으로, 매출의 0.1% 또는 영업이익의 1%를

년스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22년 유엔 총회에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일명 환경권)’를 기본 인권으로 승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며, 유엔인권이사회는 ‘기후변화 특별 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함¹⁴⁾. 이에 따라, SDGs에서 인권과 연계가 적었던 ‘환경’ 관련 목표 및 지표들까지 모두 ‘인권 기반 접근’이 가능하고, ‘기후변화 특별보고관’ 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인권 관점의 환경정책 수립과 이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정부는 2016년 VNR을 제출한 뒤 지난 10년 동안 VNR을 제출하지 않다가 2027년 제3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번째 VNR을 제출할 예정임.
- 중국, 일본, 유럽연합 국가 대부분이 2회 이상 제출했고, 심지어 2021년 북한도 1회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의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편임. 이는 2022년 7월, 기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에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가 연 1회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남.
- 한국 정부차원의 유엔SDGs 이행 의지는 미미한 가운데,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임.
- 지방정부의 경우, 총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57개(23.5%, 광역 15개/기초 42개)가 지속가능발전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에 참여¹⁵⁾해 활동하고 있으며, 99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40.7%)가 민관협치기구를 설치해 운영¹⁶⁾하고 있음. 지난 10년 동안 지방정부 4곳(서울 서대문구, 수원시, 당진시, 화성시)¹⁷⁾은 자발적 지방정부 보고서(Voluntary Local Review: VLR)를 유엔에 제출함.
- 한국시민사회의 경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에 참여하여 한국시민사회보고서를 7차례 제출¹⁸⁾하고, 국내외 시민사회 회의 등을 조직해 ‘동북아 시민사회 공동성명서’ 등을 발표함.¹⁹⁾ 또한, 2019년부터 매년 외교부와 ‘열린SDGs포럼’을 공동 개최하며 국내외 SDGs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음.

기여. 자산 2,000만 달러(약 280억원) 이상 & 연 매출 5,000만 달러(약 700억원) 이상 & 연간 이익 500만 달러(약 70억원) 이상 등 3개 조건 충족 기업이 대상(중소기업 이상)이며, 국가별 입법조치를 권고함.

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4)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기후변화 특별보고관 임명 공지, <https://www.ohchr.org/en/specialprocedures/sr-climate-change> 2026-03-16 방문

15)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https://icleikorea.org/>

16)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www.sdkorea.org/contents/local/sustainability_local.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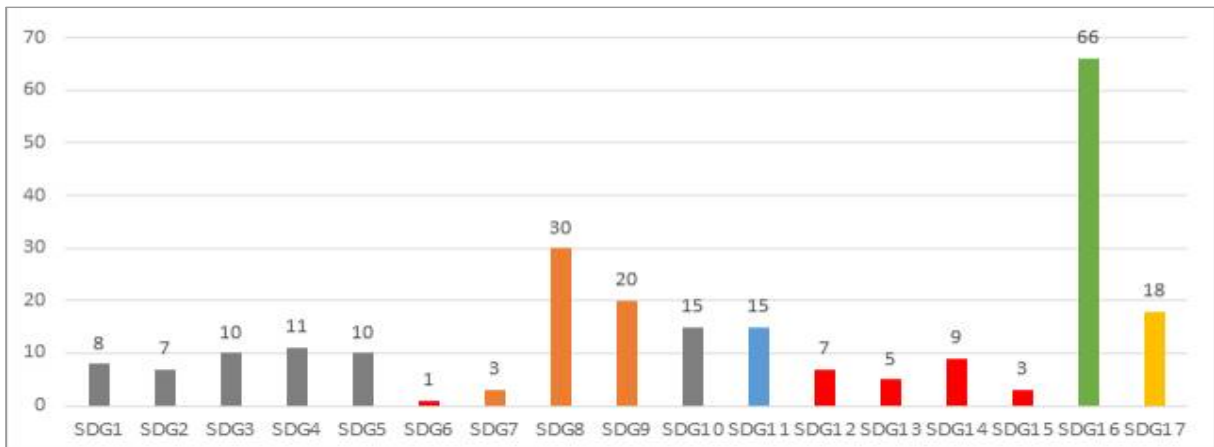
17) UNDESA, SDG Localization and the Voluntary Local Reviews, <https://sdgs.un.org/topics/voluntary-local-reviews>

18) UN SDGs Portal, Inputs to the HLPF, <https://hlpf.un.org/inputs>

19)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25.10.29., '동북아 포럼에서 에너지 전환 관련 중, 러, 몽 정부와 시민사회간 입장 대립해', <https://sdgforum.org/240>

- 2025년 기준, 한국 기업의 ESG 보고는 상장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확산되고 있으며, 2026년 이후 의무 공시 도입에 대비하여 글로벌 기준 (ISSB 등)을 반영한 공시 체계 정비가 진행 중임. 주요 기업은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²⁰⁾
- 한편, 이재명 정부(2025.6-2030.5)의 123대 국정과제와 유엔SDGs 연계 현황을 보면, 123개 국정과제 중 116개(94.3%)가 유엔SDGs와 관련됨(부록1. 참고).
- 특히, 사법정의 및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는 ‘SDG 16 평화제도’ 관련 국정과제가 66개(53.7%), ‘SDG 8 경제성장 및 노동’과 ‘SDG 9 산업혁신’ 등 경제·산업 관련 목표가 각각 30개(24.4%), 20개(16.3%)로 많이 차지해, 행정 및 사법 거버넌스와 경제산업 부문의 SDGs가 크게 진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그림 II-3])
- 다만, 한국의 현재 지속가능성 현황을 보면 환경 부문(SDG 13 기후, SDG 14 해양생태, SDG 15 육상생태)이 악화되고 있는 것과 견주어 환경 부문 관련 국정과제 수가 가장 적어, 앞으로도 한국의 환경 부문 지속가능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II-3] 유엔SDGs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연계 현황(개)



* 출처: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내부 정책자료

20) 민영은 (2026.3.17) '2026년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 시사점 고찰', 삼성SDS,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esg-disclosure-trends-and-implications.html>

1. 의회의 역할 근거 및 국제 동향

-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에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
 - “45. 우리는 또한 각국 의회가 법안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우리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의회가 담당하는 역할을 인정합니다.”²¹⁾
- 각국 의회는 ‘SDG 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의 일환으로 자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세부목표 16.6(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투명한 제도를 구축한다)과 16.7(모든 수준에서 민감하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이고,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한다)이 해당됨.
- 세계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은 2015년 제132차 총회에서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역할을 천명하는 ‘하노이 선언’을 채택함.
 -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각국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동의한 목표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목표의 부문 간 연계성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 의회와 국가 행정부 내부의 부서 간 벽을 허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충분한 논의와 모니터링 시간을 확보하여 모든 의회에서 이 목표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노이 선언, 132차 IPU 총회, 하노이, 2015.4.1.
- 세계의회연맹(IPU)은 하노이 선언 이후 SDGs를 4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두고, ‘지속가능발전·재정·무역 상설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e and Trade)’를 설치해 정책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각국 의회를 대상으로 SDGs 인식 제고와 지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정기 세미나와 매년 7월 유엔SDGs 고위급 정치포럼의 부대행사로 의회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음²²⁾.

21)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p.11

22) IPU, <https://www.ipu.org/impact/sustainable-development>, 2026.3.21. 방문

2. SDGs 이행과 의회 역할 국제 가이드라인

1) 의회 기능별 역할

- 세계의회연맹(IPU)은 SDGs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의회의 입법·예산·감독·대의 등 핵심 기능을 통해 어떻게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표 III-1〉).²³⁾

〈표 III-1〉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4대 핵심 기능별 주요 역할

의회 기능	주요 역할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 우선순위 파악: 많은 SDG 세부 목표가 법률 개정을 요구하므로, 전체 법안을 대상으로 'SDG 법률 개혁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체계화 • 관련 법안 입안: 법안 발의 및 심사 시 해당 법률이 '2030 의제' 및 특정 SDG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명시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의 영향 평가를 체계화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국가 예산 심의: 국가 예산은 SDG 이행에 재원을 배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써, 의회는 사전 공청회 및 위원회를 통해 재원이 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 • 예산 및 지출 감독: 배정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시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감독: 기존 부문별 상임위원회에 SDG 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하거나, 필요시 전담 SDG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심층적으로 점검 • 의회 조사 및 질의: 특정 이슈에 대한 의회 조사권(inquiries) 발동과 대정부 질문 및 구두/서면 질의를 통해 장관들에게 공적인 책임을 묻고 행정부를 압박
대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참여 및 촉진: 입법 및 예산 전 과정에서 공청회, 포럼, 설문조사, IT 기술 등을 통해 대중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 세계의회연맹(IPU)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의회의 SDGs 관련 역량을 평가하는 '자체 평가(Self-Assessment)' 과정을 통해 의회의 인적·물적·정치적 자원 현황 대한 현실적 판단을 진행할 것을 권고함.²⁴⁾
- 의회의 입법 기능 관련하여, '입법 전(pre-legislative)'과 '입법 후(post-legislative)' 심사 과정에서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서의 핵심 역할을 제안함.²⁵⁾
- 또한, 예산 기능 관련하여, SDGs 이행을 위한 '세입', '예산 지출', '예산 과정 모니터링'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함.²⁶⁾

23) Inter-Parliamentary Union (2016) Parlia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elf-assessment toolkit; Global Organization of Parliamentarians Against Corruption (GOPAC),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slamic Development Bank (IDB) (2017) Parliament's Role i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Parliamentary Handbook

24) Inter-Parliamentary Union (2016) Parlia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elf-assessment toolkit

25) Inter-Parliamentary Union (2025) SDG-informed legislative scrutiny: A Toolkit for Parliamentarians

26)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Guidelines for parliamentarians on budgeting for the SDGs: Making the most of public resources

가. 사전 점검: SDGs 이행 ‘자체 역량 평가(Self-Assessment)’

- ‘자체 역량 평가(Self-Assessment)’는 의회의 자발적인 활동으로써, 의장이나 위원장 등 고위급의 리더십 아래, 여야, 남녀, 소수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회 의원과 의회 직원들이 참여해야 하며 시민사회 등 외부 관계자를 초대하는 것을 권장함.²⁷⁾
- 의회가 자체 역량 평가를 시작하기 전 정부나 전문가와 협력하여 SDG 정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SDG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²⁸⁾
- 세계의회연맹(IPU)은 자체 역량 평가를 실시하기 전 아래 <표 III-2>와 같은 확인 사항을 점검할 것을 제시함.²⁹⁾

<표 III-2> SDGs 이행 자체 역량 평가 실시 전 사전 확인 사항

구분	확인 사항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및/또는 의회 지도부가 해당 자체 평가를 승인했는가?
조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활동을 누가 주도하고 조직할 것인가? •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초당적 지도부가 있는가? • 비당파적 의회 내에서 전략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도부가 있는가? • 사무국 내에 실무 업무를 조직할 수 있는 팀이 있는가? • 자체 평가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는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행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의원들과 다른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번 행사의 유용성과 목적에 대한 공동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행사에 누가 참여하는가? • 참여할 의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관심 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청되는가, 아니면 소수의 대표 그룹만 초청되는가? • 비국회의원들도 적극적인 참여자나 분야별 전문가로서 참여하는가? 비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진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활동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 전체 활동을 총괄할 진행자가 한 명 지정되는가? • 진행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합의하게 되는가? 진행자에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 진행자 선정에 예산이 필요한가, 아니면 유능한 진행자를 추천해 줄 파트너 기관을 찾을 수 있는가?
데이터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평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정부 보고서가 있는가? 분야별 위원회를 포함한 기존 의회 보고서가 있는가?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인권 조약 기구 포함)의 관련 보고서가 있는가? • 의원들이 활용할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가?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활동의 기대 성과는 무엇인가? 보고서인가? 의회를 위한 실행 계획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에 주력하는 이해관계자(예: 국회의원, 비정부기구, 독립 기관) 간의 새로운/더 강력한 네트워크 구축인가?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인가? 파트너십 구축인가? • 이러한 성과를 도출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예: 의회 사무국, 위원회)?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한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는가? 후속 조치를 담당할 사람은 누구인가? 후속 조치는 어떻게 관리될 예정인가?

27) 상동
28) 상동
29) 상동

- 세계의회의연맹은 각국 의회가 이미 수행한 자체 역량 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총 8개의 참고용 ‘자체 평가 질문’을 제시함. 의회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현황을 확인하는 질문(Part A)과 영향 및 우선순위를 성찰하는 질문(Part B)으로 구성되어 있음(〈표 III-3〉).³⁰⁾

〈표 III-3〉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자체 역량 평가 질문 예시

평가 영역	1) 현황 파악용 질문(Baseline: Part A)	2) 성찰용 질문 (Reflection: Part B)
질문 1. 의회 내 SDG 이해 구축	신임 의원을 위한 브리핑 자료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SDG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원들이 SDG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구조(예: 의회 실무 그룹, 코커스 등)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질문 2. 글로벌 SDG의 지역화	SDG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이 존재합니까?	의회는 국가 SDG 계획 수립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질문 3. SDG의 주류화	의회가 자체 구조 내에서 SDG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당했습니까?	SDG가 의회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주류화되었습니까?
질문 4. SDG 지원 입법	제안된 법안에 해당 법안이 SDG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법안이 SDG 이행을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법안을 검토합니까?
질문 5. SDG 자원 마련	예산안에 SDG 이행을 위한 특정 자금이 할당되어 있습니까?	의회는 예산을 논의하고 채택할 때 SDG를 어느 정도까지 고려합니까?
질문 6. SDG 이행 모니터링	귀하의 국가는 SDG 이행 진전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의회는 정부가 생산한 SDG 이행 진전 보고서나 관련 문서를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고, 토론하며, 조치를 취합니까?
질문 7. 대중과의 소통	의회는 SDG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대국민 협의를 개최합니까?	의회는 SDG 이행을 지원하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대중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질문 8. 취약계층 보호 보장	귀하의 국가에서는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이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의회는 SDG 이행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질문별 추가 질문은 '부록 3.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자체 역량 평가 질문 예시' 참조

- 각국 의회는 질문 중 일부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제안된 모든 질문을 반드시 논의할 필요는 없음.

나. 입법: SDGs 기반 입법 심사(SDG-informed Legislative Scrutiny)

- ‘SDG 기반 입법 심사’는 SDG 관점에서 입법적 선택과 그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담론적 과정으로써,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안한 법안 및 개정안을 검토할 때 해당 법안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또한 SDGs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30) Inter-Parliamentary Union (2016) Parlia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elf-assessment toolkit

- 잠재적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³¹⁾
- 예를 들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안을 개정할 때, 이러한 법률이 SDG 13(기후 행동)뿐만 아니라 SDG 6(물과 위생), SDG 7(에너지), SDG 12(소비와 생산), SDG 14(해양생태), SDG 15(육상생태)와 같은 관련 목표는 물론, 파리 협정의 달성에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³²⁾
 - 이를 통해, ▲의회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SDG와 관련된 입법을 주도하고, ▲SDG의 관점에서 입법을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또한, ▲인권 이행 약속의 진척 상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고, ▲SDG 간의 시너지 효과와 상충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SDG의 상호 연관성을 다루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뒷받침할 수 있음.³³⁾
 - 세계의회연맹(IPU)은 법률 초안 및 기존 법률을 SDG 렌즈를 통해 검토하여,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① 입법 전(사전 심사)과 ② 법안 시행 후(사후 심사) 두 단계에 걸친 입법 심사를 제시함.³⁴⁾

[그림 III-1] 입법 전 과정에 걸친 SDG 기반 입법 심사



① SDGs 기반 입법 전 심사(SDG-Informed Pre-Legislative Scrutiny)

- 입법 전 심사는 법안이 채택되기 전에 그 초안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써, 이 절차의 주된 목적은 법안 초안이 양질인지, 그리고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³⁵⁾
- 이 과정에서 규제 목표의 타당성, 규제 방안의 적절성, 예상되는 결과, 규제

31) Inter-Parliamentary Union (2025) SDG-informed legislative scrutiny: A Toolkit for Parliamentarians

32) 상동

33) 상동

34) 상동

35) Inter-Parliamentary Union (2025) SDG-informed legislative scrutiny: A Toolkit for Parliamentarians

로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층 파악, 그리고 법안 문안의 구조와 품질 등을 검토함. 또한 해당 법안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함.³⁶⁾

- SDG 기반 입법 전 심사 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표 III-4>와 같음.³⁷⁾

<표 III-4> SDGs 기반 입법 전 심사 절차(6단계)

심사 단계	주요 내용
① 1단계: 법안과 SDG의 연관성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중인 법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SDG를 식별 예) 고용 관련 법률은 SDG 8, 1, 5, 10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내용에 따라 SDG 2, 3, 9와도 간접적으로 연관 가능
② 2단계: 주요 심사 질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에 기반한 입법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조사에서 다루어야 할 질문 목록을 공식화 예) 고용법 초안 관련 SDG 기반 입법 심사 질문: '법안 초안은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가(8.1)? 1인당 성장률은 몇% 정도 예상할 수 있는가?', '법안 초안은 고용,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을 어떻게 줄이는가(8.6)?'
③ 3단계: 데이터 수집 및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질문의 답변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예) 양적/질적 데이터, 데이터 세분화 등 신뢰성 있는 정보 데이터를 국가기관에 요청하거나, 학계 및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획득
④ 4단계: 법안이 SDG에 미칠 잠재적 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여 해당 법안의 SDGs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또는 중립적 영향을 분석 예) 고용에 관한 법률 초안의 경우, 자문회의 결과, 선택된 자격 기준이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성별의 수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조사됨. 따라서 SDGs에 대한 기대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성평등이나 불평등 분야에서는 부정적(SDGs 5 및 10).
⑤ 5단계: SDG를 가장 잘 촉진하는 입법 대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가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에 중점. SDGs 달성과 법안 목표를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의 유무가 관건 예) 고용법 초안의 일부 측면이 특정 인구 그룹에 원치 않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별 또는 연령별 요구 사항을 제거하는 등 모든 수혜자에게 균형 잡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재설계
⑥ 6단계: 사후 검토를 위한 모니터링 목표 및 일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벤치마킹 및 입법 후 검토를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 예) 고용법 초안의 경우, 특정 기관이 매년 제도 수혜자의 수와 특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모니터링 조항을 도입

② SDGs 기반 입법 후 심사(SDG-Informed Post-Legislative Scrutiny)

- SDGs 기반 입법 후 심사는 법안 시행 후 그 효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³⁸⁾.
- SDG 기반 입법 후 심사 절차는 총 6단계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표 III-5>와 같음³⁹⁾.

36) 상동

37) 상동

38) 상동

39) Inter-Parliamentary Union (2025) SDG-informed legislative scrutiny: A Toolkit for Parliamentarians

〈표 III-5〉 SDGs 기반 입법 후 심사 절차(6단계)

심사 단계	주요 내용
① 1단계: 법안의 목표 및 SDG 연관성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SDG가 심사 중인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지 파악 예) 어떤 SDG가 (직접, 간접적 또는 교차 방식으로) 심사 대상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가? 해당 법안이 SDGs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② 2단계: 심사 질문에 SDG 관련 우려사항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 관련 우려 사항을 입법 심사 질문에 통합 예) 법과 그 목표는 SDGs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법이 남성, 여성 및 기타 인구 집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
③ 3단계: 데이터 수집 및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거 기반 평가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데이터 체계가 필요 예) 법안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없었는지(그리고 왜), 사람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법률의 잠재적인 부정적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탐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는 것이 특히 중요
④ 4단계: SDG 정합성 평가 및 권고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의 법안이 어떻게 SDGs 달성을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촉진하는지 평가 예) 조사 중인 법률의 결과와 영향이 SDGs에 기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가? 입법 심사 결과는 전체 프로세스의 개요, SDGs 정합성을 정리해 보고서로 제시. 보고서는 또한 법률과 관련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제기된 초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권고 사항을 제시
⑤ 5단계: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반응)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 후 조사 보고서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정부가 권고 사항에 응답하도록 요청.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으나 반대할 경우 정부는 이유를 설명
⑥ 6단계: 후속 조치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가 보고서와 조사 결과를 배포하고 정부의 대응을 요청하여 대화를 시작한 후에는 일관된 후속 조치를 수행 예)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후 정밀 조사 결과를 언급, 보고서에 대한 전체회의 토론, 후속토론회 개최, 후속 증거 세션 개최, 추가 조사회 개최, 공청회 개최

③ 가상 ‘SDGs 기반 입법 심사’ 사례 연구⁴⁰⁾

- 예를 들어, ‘기후 회복력 법안(Climate Resilience Act)’ 초안이 상정된 상황을 가정하여, 의회가 SDG 13(기후 행동) 및 국가결정기여(NDC)를 렌즈로 삼아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은 〈표 III-6〉과 같음.
- SDG 기반 사전 입법 심사를 통해 모호한 법안에 ‘측정 가능한 목표와 평가 장치’를 반영하고, 사후 입법 심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성과를 점검하여 ‘정책 궤도 수정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도출함.

40) 상동

〈표 Ⅲ-6〉 가상 ‘기후 회복력 법안’의 SDGs 기반 입법 심사 사례 연구

구분	사전 입법 심사 (Pre-legislative scrutiny)	사후 입법 심사 (Post-legislative scrutiny)
심사 시기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기후 회복력 법안’ 초안) 상정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 제정 4년 후, 독립적인 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
심사 초점 및 주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 관련 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가? (SDG 13.1) • 국가결정기여(NDC) 목표(전력 부문 온실가스 100% 감축, 에너지 효율 30% 증가, 2050년 넷제로 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 성별, 소외계층 등 모든 인구 집단에 균형 잡힌 영향을 미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심사에서 설정한 객관적 목표(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30% 향상 등)를 달성했는가? • 처벌 및 벌금 조항이 효과적이었는가? • 특정 인구 집단(소외/취약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주요 발견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가능한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의 회복력 강화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려움 • 정책과 조치가 의회의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NDC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음 • 성평등 및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나 심사가 없어 원치 않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심사에서 결정된 정량적 목표를 부분적으로만 달성함 • 전력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순조로우나, 에너지 효율 향상률은 10%에 그쳐 목표(30%)에 미달함 • 처벌 조항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효성이 부족함 • 기후 변화 조치로 인해 연안 지역 사회에 기후 난민 및 인간 안보 문제가 발생함
위원회의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기한이 정해진 목표(NDC 관련)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 • 4년마다 법안의 효과, 달성도,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리뷰 조항’ 포함 • 정부가 NDC 이행 진척 상황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모니터링 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에 강력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연례 보고 요구 • 대국민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평등 및 인권 위원회가 기후 완화 조치가 취약/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 기후 변화 기금 조치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위탁

○ 한편, 사전 및 사후 입법 심사를 진행할 때 의원 및 직원이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확인 사항과 예시 질문 목록은 ‘부록 3.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자체 역량 평가 질문 예시’ 참조 .

다. 예산: SDG 기반 예산 심의

○ 세입, 지출, 모니터링 등 총 3가지 측면의 예산 과정과 관련하여 SDGs 기반 예산 심의 방안을 제시함.⁴¹⁾

41)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Guidelines for parliamentarians on budgeting for the SDGs: Making the most of public resources

〈표 III-7〉 SDGs 기반 예산 심의 방안

구분	주요 과제	의원의 주요 실천 방안
1. 세입	조세제도 개선과 재원 누수 방지를 통해 정부의 세입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제도의 정비: ▲기존 조세 조약을 검토하여 세법의 허점을 막고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 지원,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공식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조세 정책(예: 누진세) 옹호, ▲환경 및 보건 목표에 부합하는 탄소세, 건강세(설탕세 등) 도입 장려 • 부채의 지속가능성 점검: 정부에 부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 및 모니터링 • 공적개발원조(ODA) 및 불법 자금 흐름(IFFs) 관리: 국가 예산 문서에 ODA가 투명하게 기록되도록 하고, 다국적 기업의 기본 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및 자금 세탁 방지법 강화
2. 지출	한정된 예산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적절히 지출하여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관점 유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PCSD) 및 중기 재정 계획(MTBFs)에 SDGs 지표 반영 • 정책 우선순위 및 조율: 자원의 한계로 인해 상충하는 부처 간 목표 상충 문제와 우선순위에 대해 폭넓은 대중 토론을 촉진하여 합의 도출 • 예산 낭비 제거 및 입법 영향 평가(PLS): '사후 입법 영향 평가(PLS)'를 활용하여 기존 의무 지출 법안의 낭비 요소를 찾아내고 비용 절감 방안 도출 •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세분화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예산 결정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국가 통계 기관의 재원을 보장
3. 모니터링	예산편성-채택-집행-감사로 이어지는 주기 동안,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추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요구 및 비상 예산 감시: 팬데믹 등 비상 지출에 대한 정기적인 지출 검토 및 성과 보고를 정부에 요구하여 투명성 회복 • 국가 개발 전략과 SDGs 연계: SDGs를 국가 개발 전략으로 변환하고, 이 전략이 의회 표결을 거치도록 강제 • 예산 지표와 진척도 점검: 예산 문서 안에 각 부처의 예산이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술형 보고서)을 포함하도록 요구. 성인지 예산, 녹색 예산 등을 모니터링 기준으로 삼거나 최고감사기관(SAI)의 성과 감사 데이터를 적극 활용 가능 • 자발적 국가보고서 과정 참여: 기존 위원회의 감독 업무(포트폴리오)에 SDGs 프레임워크를 통합하고 자발적 국별 검토(VNR)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2)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추진기반 구축

- 유럽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ESDN)에 따르면, 대다수 의회의 구조는 정치적 장벽을 넘어선 협력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정당 간 또는 여당과 야당 간으로 분열될 수 있으며, 의제의 업무는 서로 반드시 상호작용하지 않는 위원회 단위로 엄격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임.⁴²⁾
- 지속가능발전은 다양한 정치적 과제를 통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강력한 수직적 및 수평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반부패의원연맹(GOPAC)은 의회가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주도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42)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조직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함:43)

① 전략적 평가 및 중장기 계획 수립

- **수요 조사 및 역량 진단:** 의회가 SDGs 이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인력 및 시스템에 대한 감사나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역량 강화를 위한 다년간의 전략적 개발 계획을 수립
- **입법 개혁 우선순위 파악:** 모든 SDG 목표와 세부 목표를 검토하여 새로운 법률이나 개정이 필요한 대상을 식별하는 'SDG 법률 개혁 요구 평가 (SDG Law Reform Needs Assessment)'를 실시하여, 중장기 입법 개혁 의제를 마련

② 전담 조직 및 제도적 장치 마련

- **SDG 전담 위원회 또는 담당자(Focal Point) 지정:** SDGs 전반의 이행을 감독할 단일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위원회(예: 사회문제 위원회, 외교 위원회 등)에 SDG 담당 역할을 부여하여 부처 간 정책 조율과 감시를 총괄
- **초당적 실무 그룹 구성:** 당파적 장벽을 허물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SDG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SDG 이행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장으로 활용
-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개정:** 법안이나 예산안이 의회에 도입될 때 해당 법안이 SDG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SDG 영향 분석(SDG Impact Analysis)'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의사규칙을 개정

③ 전문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전문 보좌진 및 특수 부서 운영:** 의원들이 전문적인 데이터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직원을 배치. 특히 예산 심의 및 지출 감시를 위해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회 예산처(Parliamentary Budget Office)'와 같은 특수 부서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
- **지식 산출물 및 교육 제공:** 의원들이 일상적인 의정 활동에서 SDGs를 쉽게 고려할 수 있도록 국가 상황에 맞는 가이드북이나 지식 산출물을 개발하고, 정기적인 워크숍과 교육을 제공

④ 범정부 및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 체계

- **국가통계기관과의 협력:** SDG 지표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데이터를

43) Global Organization of Parliamentarians Against Corruption (GOPAC),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slamic Development Bank (IDB) (2017) Parliament's Role i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Parliamentary Handbook

수집·처리하는 국가통계기관(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데이터에 의회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최고감사기구와의 공조:** 정부 예산이 SDG 이행에 올바르게 쓰였는지 추적하기 위해 국가 감사기관(Supreme Audit Institution)과 협력하여 성과 감사 보고서를 공유하고 심층 검토
- **국제기구 파트너십:**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기구, 국제 및 지역 개발 은행(예: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같은 외부 기관과의 지원 파트너십을 구축

⑤ 정기적인 시민 참여 메커니즘 확보

- **제도화된 피드백 루프 구축:** 법안 제정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피드백 체계(예: 포럼 등)를 구축
- **지역화(Localization) 연계:**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역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는 지역/지방 당국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선거구 단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그림 III-2] 의회의 SDGs 이행 기반 구축 5대 핵심 요소



○ 한편, 유럽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ESDN)는 각 의회가 3~5년마다 SDG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자체 평가할 것을 권장함.⁴⁴⁾

44)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3. 해외 사례

- 유럽연합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ESDN)가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 24개 의회를 대상으로 SDGs 기반 의회 활동 현황 조사를 진행함.⁴⁵⁾
- ESDN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4개 국가의 모든 의회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 SDGs가 본회의의 명시적인 토론 주제로 다루어졌으나, 세계의회연맹(IPU)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SDGs 이행 구조 및 체계를 구축한 의회는 없었으며, 입법·예산·감독·대의 활동 과정 모두에서 SDGs 접근이 활발한 의회 역시 없는 것으로 조사됨.⁴⁶⁾
- 주로 입법 활동 시에 SDGs 접근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22개국), 국정 질의 등 감독 활동(20개국), 예산 심의 과정(12개국), 대의 활동(7개국) 순으로 SDGs 접근 사례가 조사됨:⁴⁷⁾
 - **입법(Legislation):** SDGs나 2030 의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법안은 비교적 드문 편.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포괄적인 특성 덕분에, 명시적 언급이 없더라도 법안들이 2030 의제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가 다수. 대부분의 의회에서 법안 영향 평가 시 환경, 성평등, 사회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만, 이것이 항상 SDGs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주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NSDS)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거나, 해당 전략을 토론하고 승인하는 등 입법 과정에 관여
 - **예산(Budget):** 대부분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SDGs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음.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2021년에 예산 항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녹색 예산(green budget)'을 도입했고, 오스트리아 의회의 예산처는 예산이 SDG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감독(Monitoring & Accountability):** 많은 정부가 의회에 SDGs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또한, 유엔에 제출하는 자발적 국별 검토(VNR) 작성 과정에 의회를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의원들은 주로 대정부 질문이나 서면질의, 위원회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에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

45)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유럽연합지속가능발전네트워크(ESDN)는 2021년 4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유럽연합 48개 회원국의 의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의회의 입법·예산·감독·대의 활동에서 SDGs 기반 접근이 이루어졌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 도출. 총 24개(50%) 유럽 의회가 응답한 결과를 분석. 다만, 응답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나 지속가능발전 자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지속가능발전(SD)과 관련된 주제 및 이슈를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 포괄적으로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한 응답은 분석에 포함된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새로운 기후 및 환경 법안 등)는 분석에서 제외

46) 상동

47) 상동

- **대의(Representation):** SDGs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민사회 참여 이니셔티브는 아직 소수에 불과. 독일 연방하원은 시민 평의회를 구성해 자문을 구했고, 프랑스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제안할 수 있는 ‘parlement & citoyens’ 플랫폼을 운영. 스페인은 ‘Parlamento 2030’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의회의 SDG 관련 활동을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
- 많은 국가에서 SDGs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기후, 환경 등 관련 이슈를 다루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주로 환경, 토지 이용, 농업 위원회나 환경부에 할당하는 등 환경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함⁴⁸⁾.
- 의회 내 지속가능발전 전담 위원회 설치의 경우, 대내외적인 명확한 소통 창구가 된다는 장점이 존재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해당 위원회만의 고유 업무로 치부해 버리는 칸막이 현상을 초래하는 등 명암이 존재함.⁴⁹⁾
- 한편, ESDN은 전반적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의 많은 의원들이 SDGs를 전혀 모르거나, 단순한 환경 및 국제 개발 이슈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격차 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하여 모든 정책 분야에서의 시급한 조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를 제안함.⁵⁰⁾
- 본 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의회의 SDGs 이행 추진 기반과 의회 4대 기능별 SDGs 접근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1) 의회 추진 기반: 지속가능발전 전담 기구 설치·운영

가. 핀란드 의회의 ‘미래위원회’⁵¹⁾

- 핀란드는 현재 2030 의제에 반영된 지속가능발전 문제들을 다루는 전담 의회 위원회를 가장 먼저 설립한 선도적인 국가로, 핀란드 의회의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가 1993년에 임시 위원회로 처음 설립된 이후 2001년부터 핀란드 의회의 상설 기구로 전환됨.
- 핀란드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면, 미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하는데, 정부

48)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49) 상동

50) 상동

51) 상동; 핀란드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총리는 의회가 선출. 입법부는 단원제이며 국민이 선출. 의회 내 다수당에서 총리를 배출하며,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구조. Wikipedia, Politics of Finland,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Finland, 2026-03-26 방문.

조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포함됨. 정부는 다음 연례 보고서에서 미래위원회가 제안한 입장문(position statements)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미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를 위한 세미나 및 기타 행사를 조직하며, ‘2030 의제’ 및 SDG 달성을 위한 국가 로드맵과 관련하여 간담회 등을 진행함.

나. 독일 연방의회의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⁵²⁾

- 의회 내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Parlamentarischer Beira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PBnE)’를 2004년 설립함.
- 이 자문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대한 입장문(position statements)을 발표하는데, 이 입장문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지만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보고(noticed)되며, 의회의 활동을 가시화하고 시민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함.
- 자문위원회는 지표 및 국가 목표 개발, 특정 메커니즘 결정, 다양한 정책 간의 연계 등 2030 의제 이행 전반에 걸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특히,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활동을 조율하는 연방총리실(Federal Chancellery)과 긴밀히 협력함. 예를 들어, 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장관위원회(State Secretaries Committee)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정부가 제출한 법안 초안의 영향 평가(Impact Assessment)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충분한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의회 간 협력 위원회’⁵³⁾

- 인도네시아 의회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는 담당 정부 부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직접 감독하면서, 기존의 의회 감독 권한 내에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자연스럽게 주류화함.
- 하원에 설치된 ‘의회 간 협력 위원회(Committee for Inter-Parliamentary Cooperation, PKSAP)’는 위원회 본연의 전반적인 임무의 일환으로 의회 내 SDGs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SDGs와 관련된 다수의

52)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독일의 정치체제는 연방제·양원제·의원내각제로, 입법부의 경우, 연방의회(하원, 국민 직접 선출)와 연방평의회(상원, 16개 주정부 파견 대표)로 구성되며,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연방총리를 중심으로 연방 내각이 구성. 명목상 국가 원수인 연방대통령은 5년 임기의 간접선거로 선출. Wikipedia, Politics of Germany,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Germany, 2026-03-26 방문.

53)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Guidelines for parliamentarians on budgeting for the SDGs: Making the most of public resources; 인도네시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로 국민직선제. 입법부는 양원제로 모두 국민이 선출하는데, 정당 중심의 하원(DPR)과 34개 주 지역 대표로 구성된 무소속 상원(DPD)으로 대별. 한편, 상·하 양원협의체인 국민평의회(MPR)가 있으며, 헌법 개정과 탄핵 의결권을 보유. Wikipedia, Politics of Indonesia,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Indonesia, 2026-03-26 방문.

비중 있는 주요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입법

가. 튀니지: 지속가능발전 헌법기구 설치 및 환경에 대한 헌법적 및 법적 보호⁵⁴⁾

- 2011년 혁명 이후, 튀니지 입법자들은 2014년 1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 세대의 권리를 위한 위원회(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를 독립적인 헌법 기구로 설립을 규정하는 등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을 지지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 튀니지는 환경 보존과 안전한 기후에 대한 명시적인 헌법적 약속을 포함한 아랍권 최초의 국가이자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국가임.
- 위원회의 위원들은 튀니지 의회(국민의회, 하원)에 의해 임명되는데,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며, 6년 단임제. 경제, 사회, 환경 문제 및 개발 계획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자신의 책임 분야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함.
- 이러한 헌법 조항은 환경 문제에 대한 법률 및 정책 개혁을 지지하는 의원 그룹의 적극적인 로비 노력의 결과로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기후 의회(Climate Parliament)’라는 NGO와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의 지원을 받음.
- 헌법을 개정한 의원 그룹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재분배하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전환 기금(Energy Transition Fund)’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음.

나. 이탈리아: 지속가능발전 원칙의 헌법 포함 추진⁵⁵⁾

- 지속가능발전(SD) 원칙과 환경 보호를 헌법에 포함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이 추진됨. 의회 본회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NSDS)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상원 환경위원회는 당시 환경·영토·해양부 장관(현 생태전환부)을 출석시켜

54) Global Organization of Parliamentarians Against Corruption (GOPAC),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slamic Development Bank (IDB) (2017) Parliament's Role i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Parliamentary Handbook; 튀니지의 정치체제는 의원집정부제, 단원제. 국민 선거로 대통령 및 의회 의원 선출. 2021년 7월 의회 기능을 정지시키며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2022년 3월 의회를 다시 해산하고 당해 12월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는 등 현재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 Wikipedia, Politics of Tunisia,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Tunisia, 2026-03-26 방문

55)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이탈리아의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 양원제. 상하원 모두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입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 일반적인 양원제와 차이가 있음. 상원은 20개 주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하원은 전국구 비례대표제로 선출됨. 총리는 대통령이 다수당 당수로 지명하고 양원의 신임투표로 선출되며,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 Wikipedia, Politics of Italy,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Italy, 2026-03-26 방문.

국가 에너지 전략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함.

- 다. 독일: 입법 시 핵심 지침으로 채택⁵⁶⁾
- 연방하원(Bundestag)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입법의 '핵심 지침(guiding principle)'으로 삼기 위해 여러 정당이 주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채택.
- 연방상원(Bundesrat)의 경우, 각 연방 주(Federal States)들이 SDGs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법안들을 상원에 제출함.
-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제출하면 의회가 이를 검토하며, 지속가능발전 자문위원회(PBnE)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초안의 영향 평가가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충분한지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 세부 정보를 요구함.

라. 스페인: 입법 시 SDGs와 연계⁵⁷⁾

- 의원들이 발의하는 입법 제안서(Legislative proposals)에 SDGs가 자주 언급되는데, 특정 SDGs를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법안 사례로, 스페인의 기후변화법은 법안의 전문에 해당 법안이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힘.

마. 콜롬비아: 'SDG 13 기후행동' 이행을 위한 탄소세 도입⁵⁸⁾

- 2016년, 콜롬비아는 SDG 13 기후행동 목표 이행을 위한 세입 창출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여, 시행 첫해에 1억 6,1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함. 또한 2017년 국가 탄소 배출량을 1%가량 직접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됨.
- 징수된 세금은 국가 내 분쟁을 겪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환경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평화의 콜롬비아(Colombia in Peace)' 기금으로 지정되어 사용됨.
- 한편, 세금의 직접 납부 방법 이외에 탄소 생산 기업이 국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저탄소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조세 공제를 받아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도 허용함.

56)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57)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스페인의 정치제도는 입헌군주제이자 의회의 하원에서 선출된 총리가가 실권을 갖는 내각책임제. 입법부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며, 양원 모두 입법권을 보유하나 총리불신임권은 하원만 가능하는 등 하원의 권한이 보다 강력함. 하원은 52개 주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국민 투표 선출. 상원은 52개 주별로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의원과 자치지역 의회가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 Wikipedia, Politics of Spain,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Spain, 2026-03-26 방문.

58)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Guidelines for parliamentarians on budgeting for the SDGs: Making the most of public resources; 콜롬비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중심제, 양원제. 상원은 전국 단위로 선출되고 하원은 주별로 선출,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CO, 2026-03-26 방문

바. 남아공: ‘SDG 3 건강과 웰빙’ 이행을 위한 건강세(health tax) 도입⁵⁹⁾

- 남아공 의회는 담배, 주류, 설탕, 화석 연료와 같이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건강세(health tax)를 부과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동시에, 보편적 의료 보장과 같은 글로벌 보건 목표(SDG 3: 건강과 웰빙)를 지원할 재원을 마련함.
- 201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당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비만, 제2형 당뇨병, 심장병, 충치 등을 줄이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설탕으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음료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의 성분을 재구성하도록 유도함.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첫해에만 32억 랜드(약 2억 1,400만 달러)의 세입을 추가함.

3) 예산

가. 프랑스: 녹색 예산(green budget) 도입⁶⁰⁾

- 프랑스 의회는 2021년에 녹색 예산(green budget)을 도입. 이 예산 시스템은 개별 예산 항목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구체적으로 예산 항목의 영향을 유리함(favourable), 중립적(neutral), 불리함(unfavourable)으로 나누어 평가. 평가는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EU 분류체계’의 6개 핵심 영역을 기준으로 함. 이 6개 영역은 기후 변화 완화, 기후 변화 적응, 해양 자원 보호,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통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및 복원임.

나. 오스트리아: 정부예산의 SDGs 영향 분석⁶¹⁾

- 의회 사무처 소속 예산처(budget office/service)가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직접 분석. 예산이 의도하는 모든 영향(intended impacts)은 관련 있는 1개 이상의 SDG 목표에 반드시 귀속

59)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Guidelines for parliamentarians on budgeting for the SDGs: Making the most of public resources; 남아공의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 성격의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은 의회 간선제로 하원의원 중 선출되며, 대통령 당선인은 의원직을 사직하고 대통령 임기를 보장받음. 의회는 양원제로 국민이 선출하며, 9개 주를 대표하는 상원(전국국가평의회)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구성되는 하원(국민의회)으로 이루어짐. Wikipedia, Politics of South Africa,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South_Africa, 2026-03-26 방문.

60)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프랑스의 정치제도는 의원집정부제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외교 및 국방 권한을 갖고 의회 다수당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 의회는 양원제로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의회인 하원과 지자체장과 의회 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의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 상원으로 구성. Wikipedia, Politics of France,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France, 2026-03-26 방문

61)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오스트리아는 연방제 준대통령제.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연방총리는 대통령이 임명. 의회는 양원제로 운영되며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의회인 하원과 9개 주의회가 선출하는 연방평의회인 상원으로 구성. Wikipedia, Politics of Austria,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Austria, 2026-03-26 방문

(attributed)되어야 함.

- 예산처는 예산뿐만 아니라 때때로 개별 법안들이 SDG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수행하고, 예산 위원회에서 SDGs가 논의됨.
- 2021년에는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관련 토론이 진행됨. 정부의 최고감사기관(감사원)이 SDGs 이행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의원들의 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예산 위원회 논의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
- 다. 핀란드: 화석연료 보조금 등 SDGs에 반하는 법률 정비 및 보조금 삭감⁶²⁾
- 핀란드 정부는 2019년 자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면밀히 조사한 후, 환경에 유해한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2018년 기준 화석 연료는 핀란드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40%를 차지함.
- 당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기반에 투입되는 국가 보조금의 규모는 대략 35억 유로로, 이러한 보조금의 대부분은 특정 산업 부문이나 지역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세율 인하 및 기타 간접 보조금 형태였음.
-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어긋나는 기존 법률과 보조금을 검토 및 삭감함으로써 재정 낭비를 없애고, 국가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시작함.

라. 노르웨이 & 스웨덴: 정부의 SDGs 연계 예산 보고서 제출⁶³⁾

- 노르웨이 재무부(MoF)는 정부의 각 부처에 해당 부처의 활동이 책임지고 있는 국가 및 국제적 목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하는 짧은 서술형 보고서(narrative)를 작성하도록 요청. 재무부는 이 답변들을 취합하여 SDGs 진척도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챕터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포함시킴.
- 스웨덴의 정부 부처들 역시 예산 문서에 자신들의 업무 영역과 SDGs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서술형 문구를 포함. 2016년 예산안에서는 SDGs가 약 100회 언급되었으며, 2017년 예산안에서는 이 수치가 두 배로 증가함.

4) 감독

가. 독일 & 핀란드 & 스페인: 정부의 SDGs 이행 현황 보고서 제출⁶⁴⁾

- 독일 의회는 정부가 SDG 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motion)을

62)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Guidelines for parliamentarians on budgeting for the SDGs: Making the most of public resources;

63) 상동

64)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채택. 독일 연방정부는 진척 상황에 대해 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함.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는 독일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문(position statement)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문서는 의회에서도 토론될 예정.

- 핀란드 정부는 매년 의회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며, 핀란드 의회는 이를 토론. 의회의 ‘미래 위원회’는 이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공식적인 답변을 준비하는데, 정부 조치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조치에 대한 제안을 포함. 정부는 다음 연례 보고서에서 의회가 제시한 입장문(position statements)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보고할 의무가 있음. 국가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의회와 협력하여 SDG 이행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함.
- 스페인 정부는 예산이 SDGs 재정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의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또한, 스페인 의원들은 유엔(UN)에 제출하는 자발적 국별 검토(VNR) 보고서를 준비하는 패널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하며, SDGs가 대정부 질문의 단골 주제(regular subject)임.

5) 대의

가. 독일: ‘시민사회 평의회(civil society council)’를 통해 의견 수렴⁶⁵⁾

- 연방하원의 원로회의(Council of Elders)는 2021년 초에 시민사회 평의회(civil society council)를 출범시킴. 이 평의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독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방하원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됨. 상임위원회 중 한 소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구했으며, 시민사회 평의회가 도출한 결론 및 독일의 미래에 대한 권고안은 2021년 4월 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됨.

나. 프랑스: ‘의회와 시민(Parlement & Citoyens)’를 통해 SDGs 국가 로드맵 의견 수렴⁶⁶⁾

- 2013년에 ‘의회와 시민(Parlement & Citoyens)’이라는 단체를 설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의회에 자신의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며, 시민들이 의원들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여러 의원들이 주도하여 2030 의제 및 SDGs 달성을 위한 국가 로드맵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특별 협의(consultations)를 진행함.

65)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66) 상동

다. 스페인: 'Parlamento 2030' 온라인 플랫폼 운영⁶⁷⁾

- 이 플랫폼은 스페인 의회 양원 및 개별 의원들의 SDGs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대중에게 공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사회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의회의 활동을 쉽게 이해 및 추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에 이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

6) 지방의회

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주⁶⁸⁾

- 바르셀로나주는 2025년 기준 인구 약 570만명, 311개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카탈루냐 지방의 중심 지역으로, 주도는 바르셀로나임.
- 스페인의 지방정치는 의원내각제 형태로, 지방의회는 단원제이며 4년 마다 의원이 선출되고, 의회가 선출한 시장이 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를 구성함.
- **SDGs 전략 계획 수립:** 바르셀로나주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의회의 2030 의제 이행을 안내하는 로드맵으로써 '전략계획(PEIA)'을 수립함.
- **SDGs 기반 예산 편성:** 2021년부터는 예산을 SDG에 맞춰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SDG 16(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과 SDG 11(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등에 많은 예산을 할당함. 또한, 지방 관보(BOPB)와 서비스 카탈로그 등도 SDG와 연계하여 운영 중임.
- **행정 거버넌스 구축:** 2020년 '2030 의제 서비스부'를 신설하여, 2030 의제를 주정부 조치의 전략적 프레임워크로 개발하고 지역화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2030 의제 대시보드'를 운영하며, 각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내부 교차 작업 포럼인 'MesA2030(+A2030)'을 통해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함.
- **의회 구성원 역량강화:** 의회 직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2018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을 개선함.
- **자치주 내 지자체 지원:** 바르셀로나주 내 311개 지자체가 독자적인 2030 의제 및 SD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지원함: ▲지방정부 네트워크 협력 계획, ▲맞춤형 2030의제 지원, ▲지자체 공무원 및 일반대중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지자체 모범사례 지도 플랫폼 'MapA2030', ▲지자체별 SDGs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플랫폼 'Visor2030' 개발

67) 상동

68) Barcelona Provincial Council (2025) Voluntary Local Review

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함.

- **대외협력:** ‘카탈루냐 2030 연합(Aliança Catalunya 2030)’의 멤버로서 카탈루냐 내 다른 지방 의회들과 함께 지역 지표 생성 등을 위해 협력. 또한, 스페인 전국의 ‘2030 의제를 위한 지방 기관 네트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르도바(Córdoba) 지방 의회와도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유럽 단위의 ‘PLATFORMA’, ‘유럽연합 지역위원회(CoR)’, 그리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 UN-Habitat 및 UCLG와 함께 SDG 지역화에 대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고, 연례 보고서 작성 및 고위급 포럼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홍보하고 있음.

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⁶⁹⁾

- 수라바야(Surabaya)는 자바섬 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290만명(2021)의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임. 5년마다 지방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주민이 선출함.
- 수라바야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시장의 리더십 아래 기존 행정 조직과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채택함.
- ‘개발계획청(Bappeko)’은 수라바야시 내 SDG 이행과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도 기관으로, 모든 도시 개발 계획이 SDGs 원칙 및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 다른 주요 부서로는 ‘환경청(DLH)’이 있으며, 개발계획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중기개발계획(RPJMD)’을 준비하고, 계획에 각종 SDG 지표를 선별하여 통합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계, 민간 부문(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를 포함한 수라바야시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을 추진함.
- 지방의회는 수라바야시의 핵심적인 목표 설정 및 예산 기획 거버넌스인 ‘개발계획 심의(Musrenbang)’에 행정부 및 시민 사회와 함께 참여하는 주요 주체로 참여함.

69) Surabaya City (2021) Voluntary Local Review

4. 국내 적용 방안

1) 대한민국 의회 운영 체계 및 지원 조직 현황⁷⁰⁾

가. 국회

-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서, 본회의를 중심으로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체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현재 17개 상임위원회⁷¹⁾와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상임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소관 업무에 대응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 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거나, 통폐합하거나, 소관 부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국가적 현안이나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친 복합적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거나 특별히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이 있을 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 가능함. 목적을 달성하거나 본회의에서 정한 활동 기한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 따라 상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겸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위임.
- 국회 운영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4대 핵심 기관이 있음.
 - **국회사무처:** 국회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입법 활동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큰 핵심 기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진행 지원, 의사일정 작성,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 지원, 의원 외교 활동 및 국회 홍보 업무 지원,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예산, 회계 관리 등 역할
 - **국회도서관:** 입법 활동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지식 정보 센터. 국내외 각종 도서, 간행물, 디지털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입법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의 예산과 결산, 기금 및 재정 운용 전반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는 재정 전문 기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및 평가. 법률안 등 국가 재정 소요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중장기 국가 재정 전망. 조세 제도

70)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81.php, 2026-03-26 방문

71)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겸임 금지가 원칙이나,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겸임이 가능.

및 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및 국정 현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내 공식 싱크탱크.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회답. 국내외 주요 정책 이슈 및 입법 동향 연구 분석.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정책 분석 보고서 발간. 사회 각 분야의 쟁점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4대 핵심 지원 기관 이외에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제도가 존재함.
 -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관 부처의 법률안과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에게 심사 방향을 자문하는 핵심 역할
 - **국회미래연구원:** 2018년에 출범한 국회 산하 연구 기관으로,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시나리오를 연구하여 국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국회 사무처 산하 조직으로, 국회의원 및 보좌진 교육, 국회 소속 공무원(직원) 연수, 지방의회 및 대국민 연수를 지원
 -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의원들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정책·연구 개발 모임으로서, 2개 이상의 교섭단체(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포함) 소속 현역 의원들이 최소 10명 이상이 모여야 설립 가능. 의원들의 내실 있고 집중도 높은 연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의원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는 최대 3개로 엄격히 제한. 단체를 총괄하여 이끄는 대표의원과 실무적인 정책 연구 방향을 기획하는 연구책임의원을 의무적으로 선임(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정)⁷²⁾. 법적으로는 연구단체 설립 수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의원 당 최대 3개 모임 가입, 모임당 최소 10인 이상 구성 조건으로 인해 이론적으로 연구단체는 최대 90개를 넘을 수 없음. 일반적으로 매 국회마다 대략 60~70개 내외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며, 각 연구단체는 평균 연간 약 1,000~2,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회에서는 국무조정실 대응 상임위원회인 ‘정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음.
-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 의정연수원 등 국회 핵심 지원 조직 체계 내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담당 기구 또는 부서가 없고, 제

72)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국회의원 연구단체,

<https://open.assembly.go.kr/portal/infs/cont/infsContPage.do?infsId=IWA0021747D35167>, 2026-3-26 방문

22대 국회(2024-2028)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또는 유엔SDGs 관련 정책 연구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⁷³⁾

- 제22대 국회(2024-2028)의 국회의원 연구단체는 2026년 2월 말 기준 총 70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지속가능발전’ 또는 유엔SDGs 관련 정책·연구 논의 모임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2024)’이 있음. 다만, 17개 유엔SDGs 주제분야를 아우르기 보다 ODA 및 국제협력 정책 분야에 초점을 둠.⁷⁴⁾
- 한편, 비공식적으로 ‘국회ESGs포럼(2024, 대표의원 민병덕·정희용)’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음.⁷⁵⁾

나. 지방의회

-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정원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마찬가지로 단원제 형식이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의회 운영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사무기구의 설치, 위원회 차원의 입법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두어 보좌하도록 함.
-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의정연구소 등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입법, 정책 연구 정보를 지원하고 있음.

2) 의회 운영 및 지원 조직 체계 구축 방안

- ① [전담기구] 국회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상설위원회 설치 또는 의회 의결을 통한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설치·운영 사례와 같이 국회법 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된 의제를 다루는 전담 상설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의회 자문위원회’와 같이 매 회기 때마다 국회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73)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https://open.assembly.go.kr/portal/mainPage.do>, ‘지속가능발전’ 또는 ‘유엔SDGs’ 핵심어로 2024.5.1~2026.3.26. 기간 보고서 및 발간물 검색 결과 0건 검색.

74)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현황, <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d=O78HKE0010099W15881>, 2026-03-26 방문

75)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국회ESG포럼 소식, <https://unglobalcompact.kr/activity/%EA%B5%AD%ED%9A%8Cesg%ED%8F%AC%EB%9F%BC/%EA%B5%AD%ED%9A%8Cesg%ED%8F%AC%EB%9F%BC-%EC%86%8C%EC%8B%9D/?mod=document&uid=3215>, 2026-03-27 방문

- 위원회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 및 추진계획과 이행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평가와 향후 조치 사항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역할과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국가 로드맵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 진행, 정책·연구 활동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부여함.
 -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 마다 국가 및 지방기본전략 수립·변경 시, 2년 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법 제32조), 의회 내 전담 위원회를 둘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임.
- ② [전담인력] 지속가능발전 소관 상임 또는 특별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전담 전문위원 배치
- 의회의 위원회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지속가능발전 전담 전문위원을 배정하여 SDGs 이행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들에게 심사 방향을 자문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새롭게 지속가능발전 전담 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현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국무조정실)’ 담당 상임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전담 전문위원을 배정하여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③ [정책연구] 의회연구기관 내 핵심 연구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설정
- 국회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과 지방의정연구소의 핵심 연구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이슈 동향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행하고, 경제·사회·환경 통합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과 미래 시나리오를 연구하는 등 국제정치경제 흐름과 연계되는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④ [역량강화] 의회 교육·연수기관의 상설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연수 강좌 운영
- 의원 및 보좌진, 의회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및 지방의정연구소의 경우, 2015년~2026년 까지 지난 11년 동안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강좌 및 프로그램은 없었음.
 -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및 국가SDGs에 대한 정규 교육 과정 개설을 통해 회기별로 새롭게 구성되는 의원 및 보좌진들의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역사와

정치·경제·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국제정치·정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⑤ [정보공개] 의회 SDGs 이행 정보 포털 운영

- 스페인 의회의 ‘Parlamento 2030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례와 같이 의회 차원의 ‘SDGs 이행 정보 포털’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의회 및 개별 의원들의 SDGs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사회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의회의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에 이행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

3) 의회 기능별 역할 방안

① 입법: 헌법 개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권’ 보장과 입법 시 SDGs 연계 영향 평가 실시

- 튀니지, 이탈리아 사례와 같이 지속가능발전 및 환경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위해 헌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독일 및 스페인 사례와 같이 법률 제·개정 시 법안 초안에 대한 SDGs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를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예산: 정부 예산안에 대한 ‘SDGs 영향 평가’ 분석 시행

- 프랑스 의회의 ‘녹색 예산(green budget)’ 분석이나, 오스트리아 의회의 ‘정부 예산 SDGs 영향 분석’ 사례와 같이 정부 예산안이 SDGs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예산의 SDGs 영향 분석은 국회 예산정책처나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하거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사례처럼 정부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SDGs 연계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③ 감독: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입장문서 발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년 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독일, 핀란드, 스페인 사례와 같이 의회의 평가 및 후속 조치 요청 내용을 담은 입장문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응답을 받는 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④ 대의: ‘(가칭)의회-이해관계자 지속가능발전 포럼’ 운영

- 독일, 프랑스 사례와 같이 의정연구원이나 의원연구단체 차원에서 ‘(가칭)의회-이해관계자 지속가능발전 포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숙의공론 및 의견수렴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⑤ 대외협력: 국내외 의회/의원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국제역량 강화

-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례와 같이 ‘세계의회연맹(IPU)’ 등 국제 의회/의원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국내 지속가능발전 지방의회/의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치적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IV.
인천 SDGs 동향 및
법제도·정치·사회적 여건

1. 인천SDGs 이행 동향 및 시사점

- 국제규범인 유엔SDGs와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26-2045)>(이하 ‘인천SDGs 2026’)의 연계를 통해 ‘국제-지방’ SDGs 정책 통합성을 분석함.
 - 유엔SDGs의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이행수단 5대 분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인천SDGs 2026’의 17개 목표, 19개 세부목표를 연계하여 유엔SDGs가 지역 단위까지 어느 정도 연결되는 지를 확인하고, 향후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함.
 - 국가SDGs와 연계를 통해 정책일관성도 살펴보고자 했으나,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2026-2045)>가 아직 공표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인천의 SDGs 이행 현황은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평가함.
 - <2025 인천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2021년 수립된 <제2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25)>(이하 ‘인천SDGs 2021’)의 17개 목표, 30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에 대한 이행 평가 보고서임.

1) 유엔SDGs와 ‘인천SDGs 2026’의 통합성

- 연구진의 유엔SDGs의 5대 분야,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분류 기준은 <표 IV-1>과 같음:

<표 IV-1> 유엔SDG 5대 분야별 169개 세부목표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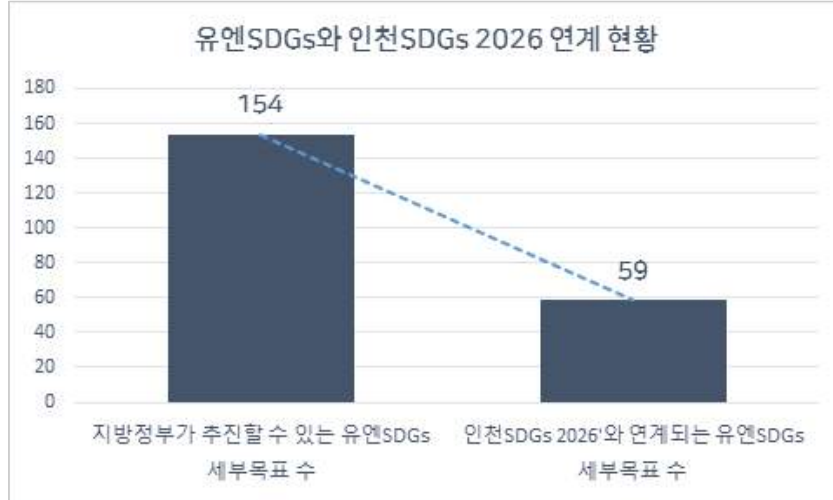
분야	유엔 SDGs 세부목표
경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 농가소득 2.4 친환경농업 2.5 유전자이용 2.a 농업ODA 2.b 농업보조금 2.c 식량가격 • 7.1 에너지접근성 7.2 재생가능에너지 7.3 에너지효율 7.a 연구개발협력 7.b 에너지 ODA • 8.1 GDP성장률 8.2 생산성 8.3 기업 활성화 8.4 자원소비효율성 8.5 완전고용/동일노동 동일임금 8.6 청년고용 8.9 지속가능관광 8.10 금융역량 8.a 무역원조 • 9.1 기반시설 9.2 산업다양성 9.3 금융접근성 9.4 친환경산업 9.5 연구개발 9.a 인프라 ODA 9.b 연구ODA 9.c ICT접근성 • 10.5 금융시장 10.6 국제금융 거버넌스 10.a WTO개도국 10.b 개발자원 10.c 송금수수료 • 12.1 국가정책 12.2 자원효율 12.6 기업ESG 12.7 공공조달 12.a 자원순환기술 12.c 화석연료보조금 • 14.6 어업보조금 14.7 해양자원이용 14.b 영세어민
사회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절대빈곤 1.2 상대빈곤 1.3 사회보장 1.4 기본서비스접근 1.5 재난대응 1.a 빈곤 ODA 1.b 빈곤정책 • 2.1 식량접근성 2.2 영양개선 • 3.1 모성건강 3.2 유아건강 3.3 전염성질병 3.4 비전염성질병 3.5 약물남용 3.6 교통사

분야	유엔 SDGs 세부목표
	고 3.7 생식보건 3.8 보건의료서비스 3.9 환경성질병 3.a 담배규제협약 3.b 필수약품 접근성 3.c 보건ODA 3.d 보건리스크관리 • 4.1 초중등교육 4.2 유아교육 4.3 고등교육 4.4 직업교육 4.5 취약계층교육 4.6 문해수리력 4.7 지속가능발전교육 4.a 교육시설 4.b 장학금 4.c 교사양성 • 5.1 성차별 5.2 성폭력 5.3 유해관습 5.4 가사돌봄노동 5.5 여성리더십 5.6 재생산권 5.a 경제권 5.b 기술교육 5.c 성평등정책 • 6.1 식수접근성 6.2 위생 • 8.7 아동노동 8.8 근무환경 8.b ILO일자리협약 • 10.1 소득증대 10.2 포용 10.3 차별금지 10.4 소득형평 10.7 이민정책 • 11.1 주거 11.2 교통 11.3 도시계획 11.4 문화자연유산 11.5 재난대응 11.a 국토계획 11.b 재난위기관리 11.c 건축ODA • 12.8 자원순환교육 • 13.3 기후교육
환경 분야	• 2.4 친환경농업 • 3.9 환경성질병 • 6.3 하수처리 6.4 물이용효율 6.5 통합물관리 6.6 담수생태계 6.a 식수위생ODA 6.b 지역참여 • 11.6 환경오염 11.7 녹지공간 • 12.3 식품폐기물 12.4 화학물질관리 12.5 자원재활용 12.b 지속가능관광 • 13.1 재난대응 13.2 기후정책 13.a 기후ODA 13.b 기후정책ODA • 14.1 해양폐기물 14.2 연안생태계 14.3 해양산성화 14.4 어업관리 14.5 해양보호구역 14.a 연구개발 14.c 국제해양법 • 15.1 육상생태계서비스 15.2 산림조성 15.3 토양황폐화 15.4 산림보호 15.5 멸종위기종 15.6 유전자원 15.7 밀렵밀매 15.8 외래종 15.9 국가정책통합 15.a 자원조달 15.b 산림ODA 15.c 지역사회참여
거버넌스 분야	• 16.1 형사범죄 16.2 아동범죄 16.3 사법정의 16.4 조직범죄 16.5 부정부패 16.6 행정제도 16.7 참여제도 16.8 국제거버넌스 16.9 법적신원 16.10 정보접근성 /기본권보장 16.a 범죄예방 16.b 국제인권법
이행수단 분야	• 17.1 조세 17.2 ODA 17.3 개도국 지원 추가 자원 17.4 부채문제 17.5 개도국투자 17.6 과학기술협력 17.7 친환경기술이전 17.8 ICT기술지원 17.9 SDGs계획지원 17.10 다자무역제도 17.11 개도국수출 17.12 개도국관세 17.13 거시경제안정성 17.14 PCSD 17.15 SD정책이행 17.16 SDGs글로벌파트너십 17.17 민관파트너십 17.18 통계역량 17.19 GDP대체지표

○ 유엔SDGs 169개 세부목표 기준, ‘인천SDGs 2026’ 연계 세부목표는 59개(38.3%)로, 국제-지방간 SDGs 정책 통합성이 낮은 편임.

- 유엔SDGs 169개 세부목표 중 국제 및 국가 차원의 권한 사항에 해당하는 15개 세부목표를 제외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총 154개(91%)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인천SDGs 2026’의 19개 세부목표를 연계함. (예: 17.10 세계무역기구 하에서 다자무역제도 추진, 17.13 글로벌 거시경제 안전성 강화 등)

[그림 IV-1] '인천SDGs 2026'와 유엔SDGs 연계 현황



- 유엔SDGs 5대 분야를 기준으로 '인천SDGs 2026'의 연계 분포를 보면, 사회분야의 연계율이 33.9%로 가장 높고, 자원, 기술, 인적자원 및 통계데이터 등 이행수단 분야의 연계율이 1.7%로 가장 낮은 편임.

〈표 IV-2〉 5대 분야별 '인천 SDG 2026'과 연계된 유엔 SDGs 세부목표 현황

구분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이행수단	합계
유엔SDGs 세부목표(개)	15	20	16	7	1	59
비중(%)	25.4	33.9	27.1	11.9	1.7	100

- 유엔SDGs 세부목표와 '인천SDGs 2026' 세부목표를 연계한 전체 현황은 '부록 4. 유엔SDGs와 인천SDGs 2026 연계 현황표'에서 확인 가능함.

2) '인천SDGs 2021' 이행 현황

-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제2차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2021-2025)>의 3대 분야 17개 목표, 30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의 이행을 평가한 보고서임.
 - 다만, 보고서는 국가SDGs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4개 분야(환경, 경제, 사회, 제도/행정)로 구분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검증이 가능한 41개 지표를 중심으로 변화추이를 점검했음.

〈표 IV-3〉 ‘인천SDGs 2021’ 4대 분야별 41개 지표 개선 현황

구분	환경	사회	경제	제도행정	합계(개, %)
양호	4(28.6)	7(43.8)	4(66.7)	1(20)	16(39.0)
다소양호	2(14.2)	-	-	-	2(4.9)
일부미흡	1(7.1)	-	-	-	1(2.4)
미흡	7(50.0)	9(56.2)	2(33.3)	2(40)	20(48.8)
평가유보	-	-	-	2(40)	2(4.9)
합계	14(100)	16(100)	6(100)	5(100)	41(100)

* 출처: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연구진 재구성

-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SDGs 2021’의 이행 현황은 전반적으로 양호 43.9%, 미흡 51.2%으로 평가됨.
- 4대 분야별 개선된 지표 분포(양호+다소 양호)를 보면, 경제 분야의 지표 개선 정도가 66.7%로 높은 반면, 제도행정 분야의 지표 개선 정도는 2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표 4-3).
- 4대 분야별 이행이 미흡한 지표 분포(미흡+다소 미흡)를 보면, 환경 분야의 지표가 57.1%로, 가장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표 4-3).
-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총 21개인 것으로 조사됨.

〈표 IV-4〉 ‘인천SDGs 2021’ 4대 분야별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지표 현황

구분	일부미흡	미흡
환경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도시공원(숲) 조성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1일 물 사용량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미세먼지 평균 농도 연안습지(갯벌) 면적 변동 추이 도시공원(숲)조성면적
사회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대상자 비율(%) 10만명당 자살률(%) 생활습관병 유병률(%) 1,000인당 요보호 아동 발생 건수 여성폭력범죄 상담 건수(건) 1,000인당 범죄 발생 건수 재난재해 피해건수, 피해자수, 피해액(원) 1,000인당 자동차사고 사상자 수 자원봉사 참여율
경제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산업재해율
제도행정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합계	1개	20개

* 출처 : 2025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연구진 재구성

- 그러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21개 지표 중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2025-2045)>에서도 관리되는 지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면적’,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 등 총 3개에 불과함.

〈표 IV-5〉 ‘인천SDG 2021’ ‘미흡’ 지표의 ‘인천SDGs 2026’ 반영 현황

구분	인천SDGs 2021	인천SDGs 2026
환경 분야	• 1인당 도시공원(숲) 조성 면적	해당 지표 없음
	• 1인당 1일 물 사용량	해당 지표 없음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반영)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해당 지표 없음
	•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수정)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 미세먼지 평균 농도	해당 지표 없음
	• 연안습지(갯벌) 면적 변동 추이	해당 지표 없음
	• 도시공원(숲) 조성 면적	→ (반영) 도시 공원 및 녹지조성면적(천㎡)
사회 분야	•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대상자 비율(%)	→ (수정)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비율 → (수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률(%)
	• 10만명당 자살률(%)	→ (수정)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율(%)
	• 생활습관병 유병률(%)	해당 지표 없음
	• 1,000인당 요보호 아동 발생 건수	해당 지표 없음
	• 여성폭력범죄 상담 건수(건)	해당 지표 없음
	• 1,000인당 범죄 발생 건수	해당 지표 없음
	• 재난재해 피해건수, 피해자수, 피해액(원)	해당 지표 없음
	• 1,000인당 자동차사고 사상자 수	해당 지표 없음
	• 자원봉사 참여율	해당 지표 없음
경제 분야	•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해당 지표 없음
	• 산업재해율	해당 지표 없음
제도 행정 분야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	→ (반영)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
	•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해당 지표 없음
합계	21개	유사 지표 7개 구성 동일 지표 3개 포함

* 출처: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2025-2045)>, 연구진 재구성

3) 시사점

- 종합하면, 유엔SDGs와 ‘인천SDGs 2026’의 연계성은 절반 이하이고, ‘인천SDGs 2021’에서 이행이 ‘미흡’했던 지표가 ‘인천SDGs 2026’에서 지속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등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이 낮은 편임.
-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은 SDGs 이행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서, 국제-국가-지방간 정책 연계,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통합, 단기-중장기 계획의 연

계를 의미하며, 유엔이 ‘17.14 정책일관성’ 세부목표를 설정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향후 ‘인천SDGs’ 수립 및 이행 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천SDGs 2026’의 경우, ‘정책 일관성’ 보다 ‘지역 특수성’이 강조되어 수립이 되었으나, 국제 및 국가 정책과의 연계와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현황 파악이 곤란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인천SDGs 2026’와 연계되지 않은 95개 유엔SDGs 세부목표와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 통계 지표를 취합하여 ‘2027 인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시 함께 평가할 것을 제안함.
- 한편, ‘인천SDGs 2026’ 관련 유엔SDGs 현황과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현황은 <표 IV-6>과 같음.
- ‘인천SDGs 2026’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별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 추진을 제안함.

<표 IV-6> ‘인천SDGs 2026’ 관련 유엔 SDGs 현황과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유엔 SDG	세부목표	핵심키워드	의회 소관위원회
경제 (22)	SDG 2	2. 5	유전자이용	산업경제위원회
		2. a	농업ODA	
		2. b	농업보조금	
	SDG 7	7.1	에너지접근성	산업경제위원회
		7.a	연구개발협력	
		7.b	에너지ODA	
	SDG 8	8.2	생산성	산업경제위원회
		8.4	자원소비 효율성	
	SDG 9	9.3	금융접근성	산업경제위원회
		9.a	인프라ODA	
		9.b	연구ODA	
		9.c	ICT접근성	
	SDG 10	10.5	금융시장	산업경제위원회
		10.b	개발자원	
	SDG 12	12.1	국가정책	산업경제위원회
		12.2	자원효율	
12.6		기업ESG		
12.a		자원순환기술		
12.c		화석연료보조금		
SDG 14	14.6	어업보조금	산업경제위원회	
	14.7	해양자원이용	건설교통위원회	
	14.b	영세어민		
사회 (40)	SDG 1	1.1	절대빈곤	문화복지위원회
		1.a	빈곤ODA	
		1.b	빈곤정책	
	SDG 2	2.2	영양개선	문화복지위원회
	SDG 3	3.1	모성건강	문화복지위원회
		3.2	유아건강	
3.5		약물남용		

구분	유엔 SDG	세부목표	핵심키워드	의회 소관위원회
환경 (16)		3.6	교통사고	
		3.9	환경성질병	
		3.c	보건ODA	
		3.d	보건리스크관리	
	SDG 4	4.1	초중등교육	교육위원회
		4.3	고등교육	
		4.4	직업교육	
		4.5	취약계층교육	
		4.6	문해수리력	행정안전위원회
		4.a	교육시설	교육위원회
		4.b	장학금	
		4.c	교사양성	
	SDG 5	5.1	성차별	문화복지위원회
		5.2	성폭력	
		5.3	유해관습	
		5.4	가사돌봄노동	
		5.6	재생산권	행정안전위원회
		5.a	경제권	
	5.b	기술교육		
	SDG 6	6.1	식수접근성	
	SDG 8	8.7	아동노동	산업경제위원회
		8.8	근무환경	
		8.b	ILO일자리협약	
	SDG 10	10.1	소득증대	문화복지위원회
		10.3	차별금지(사회)	
		10.4	소득형평	
	SDG 11	11.3	도시계획	건설교통위원회
11.4		문화자연유산		
11.a		국토계획		
11.b		재난위기관리		
11.c		건축ODA		
SDG 12	12.8	자원순환교육	교육위원회	
SDG 13	13.3	기후교육		
환경 (16)	SDG 2	2.4	친환경농업	산업경제위원회
	SDG 3	3.9	환경성질병	
	SDG 6	6.5	통합물관리	
	SDG 12	12.4	화학물질관리	
	SDG 13	13.a	기후ODA	
		13.b	기후정책ODA	
	SDG 14	14.3	해양산성화	건설교통위원회
		14.4	어업관리	
		14.a	연구개발	
	SDG 15	15.1	육상생태계서비스	산업경제위원회
		15.7	밀렵밀매	
		15.8	외래종	
		15.9	국가정책통합	
15.a		자원조달		
15.b		산림ODA		
15.c		지역사회참여		
거버넌스 (5)	SDG 16	16.3	사법정의	행정안전위원회
		16.4	조직범죄	
		16.9	법적신원	

구분	유엔 SDG	세부목표	핵심키워드	의회 소관위원회
이행수단 (13)	SDG 17	16.a	범죄예방	
		16.b	국제인권법	
		17.1	조세	
		17.2	ODA	
		17.3	개도국 지원 추가 자원	
		17.4	부채문제	
		17.5	개도국투자	
		17.6	과학기술협력	
		17.7	친환경기술이전	
		17.8	ICT기술지원	
		17.9	SDGs계획지원	
		17.15	SD정책이행	
		17.16	SDGs글로벌파트너십	
17.18	통계역량			
17.19	GDP대체지표			

2. 인천SDGs 법제도 및 이행점검체계와 시사점

- 사회·경제·환경·거버넌스·이행수단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SDGs 특성상 인천광역시의 모든 법제도 및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및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분석에 초점을 둠.

1) 분석 틀

-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 구축 지침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대 원칙’⁷⁶⁾을 기준으로 인천SDGs 거버넌스와 이행점검체계를 분석,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표 IV-7〉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대 기본 원칙

범주	원칙	주요 내용	관련 실천 전략 (예시)
효과성 (Effectiveness)	1. 역량 (Competence)	기관이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자원, 도구를 보유함	전문 인력 양성, 리더십 개발, 성과 관리, 전자정부 투자
	2. 건전한 정책 수립 (Sound policymaking)	정책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실, 이성, 상식에 기반하여 수립함	전략적 기획 및 예측, 규제 영향 분석, 국가 통계 시스템 강화
	3. 협력 (Collaboration)	모든 수준의 정부 기관과 비국가 행위자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함	범정부 조정, 다자간 파트너십, SDG 인식 제고
책무성 (Accountability)	4. 청렴성 (Integrity)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직무를 수행함	반부패 정책, 행동 강령, 내부 고발자 보호, 공정한 조달
	5. 투명성 (Transparency)	기관의 업무를 개방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	정보 공개, 예산 투명성, 공공 데이터 개방, 로비 등록부

76) UNDESA (2019) Principles of Effect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un.org/ssr/sites/www.un.org/ssr/files/news_articles/_principles_of_effective_governance_for_sustainable_development.pdf

범주	원칙	주요 내용	관련 실천 전략 (예시)
포용성 (Inclusiveness)	6. 독립적 감독 (Independent oversight)	감독 기관이 외부 영향 없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행동함	규제 기관의 독립성, 감사 독립성 보장, 행정 결정 검토
	7.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eaving no one behind)	취약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요구와 열망을 반영함	형평성 있는 재정 정책, 사회적 형평성 증진, 데이터 세분화
	8.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인종, 성별, 종교 등 어떤 구분 없이 평등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	인력 다양성 증진, 다국어 서비스, 성인지 예산, 접근성 표준
	9. 참여 (Participation)	모든 주요 집단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함	공정한 선거, 공공 컨설팅, 참여 예산제, 다자간 포럼
	10. 보충성 (Subsidiarity)	중앙은 지방이나 하위 수준에서 수행할 수 없는 과업만 수행함	재정 연방주의, 도시 거버넌스 및 지방 재정 시스템 강화
	11. 세대 간 형평성 (Intergenerational equity)	현재 세대의 필요와 미래 세대의 장기적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춤	지속가능발전 영향 평가, 장기 부채 관리, 생태계 관리

* 출처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효과적인 거버넌스 11개 원칙, 연구진 재구성

2) 유엔SDGs와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 비교

- ‘지속가능발전 2030의제(일명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의 핵심은 통합적인 이행 추진력 확보를 위한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관 설정, 이행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와 ‘발전권(Rights to Development)’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와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평가·환류 체계임.
- 이를 기준으로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를 비교하면, 취약계층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방적이고 정기적인 참여 체계와 정보 접근성이 미흡한 편임.

〈표 IV-8〉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 기준 인천 SDGs 이행 점검체계 비교

구분	유엔 SDGs 이행점검체계	인천 SDGs 이행 점검체계
법적 근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담당기구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총회 산하) (유엔 사무처 직접 실무 관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장 직속 자문기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3급 이상))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회원국 전체 국제기구 및 이해관계자 그룹(13개) 	위원 총 30인 이내(임기 2년): 행정 부서장,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지속협
이행 점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총회(4년마다/2019, 2023, 2027) 공론장: 고위급 정치포럼(매년) 글로벌지속가능성 보고서(4년) 지속가능발전 이행현황(매년) 자발적국가보고서(최소 2회 이상) 자발적 이해관계자 입장문서 및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5년마다, 홈페이지 게시) SDGs 추진점검보고(2년마다)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2년마다, 공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참여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자발적/독립적 운영) 14개 이해관계집단 및 주제별 그룹 유엔SDGs 포털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이해관계집단 회원 가입 가능 각 집단별 조직 담당자 선출(임기제) 및 소통협의, 활동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회장: 행정, 기업, 시민사회 분야별 각 1인) 150명 이내 위원(임기 2년):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 및 기업 종사자, 전문가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
지표	243개 (유엔통계위원회 관리)	5년마다 개정
정보공개/공유	유엔 SDGs포털 https://sdgs.un.org/	없음
강제수단	동료검토(Peer-Review), 이해관계자그룹 질의	없음
이행 재원	기금 조성(ODA, 기업/재단 등 출연금 등)	없음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역량, ▲건전한 정책, ▲협력 등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이행점검체계가 구축됨(〈표 IV-9〉).
- 2026년 말 인천광역시 SDG 전용 정보사이트가 구축될 예정으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면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차별금지, ▲세대간 형평성을 반영한 제도가 취약해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점검체계 개선이 필요함.

〈표 IV-9〉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개 원칙 기준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 현황

구분	내용	거버넌스 원칙
법제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2023.9. 시행)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23.9. 시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3급 이상)	효과성(역량, 건전한 정책)
심의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시장, 민간위원 1인) • 위원 총 30인 이내(임기 2년): 행정 부서장, 시의원, 학계, 시민단체, 지속협	효과성(협력)
민관협력기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공동회장: 행정, 기업, 시민사회 분야별 각 1인) • 150명 이내 위원(임기 2년):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시민 및 기업 종사자, 전문가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	효과성(협력) 포용성(참여)
이행점검체계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5년마다, 홈페이지 게시) • SDGs 추진점검보고(2년마다) •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2년마다, 공표) •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필요시)	효과성(건전한 정책) 책임성(투명성)
주요 사업	• 군/구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원 가능 • 지표 개발, 정보 보급, 교육 및 홍보, 숙의공론화장 운영 등 업무의 위탁 가능(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	포용성(보충성) 효과성(역량)
정보공개/공유	SDG 정보망 미 구축	-

- 한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해 ‘이해관계자 참여 및 민관협력체계’를 상설화한 것은 거버넌스의 ‘포용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임.
-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차별금지, ▲세대간 형평성 원칙의 반영이 미흡한 편이라 ‘포용성’ 개선을 위한 협의회 운영구조 개편이 필요함.
 - 협의회는 2년 주기로 협의회에 참여할 위원 150명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나, 유엔SDGs가 규정한 주요 권리집단(여성, 아동,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및 이해관계집단(시민단체, 기업, 교육 및 학계, 과학기술계, 농어민 등)이나 취약계층, 세대간 형평성을 위한 세부 기준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포용성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인천SDGs와 협의회 사업의 연계 관리를 통해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례에 따르면, 인천SDGs 민관협력사업 실천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가짐. 그러나 현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과 인천SDGs의 연계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책 일관성이 취약함.
 - 조례에 따르면, 협의회는 정책 제안, 자문 역할도 할 수 있으나 주로 실천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법적인 정책 심의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에 차이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천SDGs의 민관협력사업 실천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 책무를 명확히 할 경우, 정책 참여 체계인 ‘인천SDGs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숙의공론체계’는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개선 과제

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 거버넌스 원칙을 반영하여 인천SDGs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
- 조례 개정(안)은 <표 IV-10>과 같음.

<표 IV-10>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사항

관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 필요성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기반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차별적인 대우 없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기반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로 변경, 차별금지에 대한 의지 표명 필요
제3조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와 위원회로부터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제출받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

관련 조항	현행	개정안	개정 필요성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도록 명문화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성 평가)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경제·사회문화·환경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담당 공무원, 경제·사회문화·환경분야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연령, 이주 여부와 장애 유무 등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성별, 장애유무, 이주여부, 연령 등을 고려, 인천광역시의 인구학적 특성 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 명시

*출처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연구진 재구성

○ 조례에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숙의공론장 운영’ 의무화 조항 신설 : 이를 위한 지역단체와 기관의 협력 필요성 명시, 숙의공론장을 통한 수렴의견 결과를 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정하고,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노력과 활동을 공유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독립적인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며,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등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 ‘회의록’ 공개 : 시민과 공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회의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나.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 유엔SDGs 및 인천SDGs와 협의회 사업의 정책 일관성 체계 구축
 -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SDGs 및 인천SDGs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보고 체계를 만들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함.
- 협의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공개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홈페이지에 활동 자료를 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홈페이지에 통합자료 검색 기능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협의회 위원 구성 시 포용성 기준 명시
 - 협의회 운영규정에 포용성 원칙을 명기하고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협의회 운영규정에 ‘차별금지’ 원칙 신설
 - 협의회 운영규정 및 인사규정에 차별금지 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와 사업과 운영 전반에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한 후 구성원이 차별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함.
- 협의회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인천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서 정기적인 인천 지역 내 이해관계자집단 현황 모니터링 및 협의회 참여 현황 등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사업 계획과 평가과정에 네트워크 운영 사항을 신설하고, 일상적인 점검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함.

3. 인천광역시 주요 현안 분석

- 조율자(coordinator)로서 의회의 적절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규범적인 SDGs와 인천시민의 정책 수요간 간극을 확인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역학(가치 경쟁)을 가늠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일반시민의 정책 수요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광역시의회 당선자 40명(비례당선자 4명, 지역구 36명)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한 2개 정당과 35명의 총 196개 선거공약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제9대 인천시의회(2022.7~2026.6.)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인천SDGs 2021’의 3대 분야, 17개 목표, 30대 세부목표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인천시민의 필요와 ‘인천SDGs 2021’의 연계 정도를 파악함. 이 과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보강해야 할 SDGs 세부목표를 확인하고자 함.

1) ‘인천SDGs 2021’과 제9대 인천시의회 공약 연계 현황

○ <표 IV-11>과 같이 ‘인천SDGs 2021’ 30개 세부목표 중 총 25개(83.3%) 세부목표가 선거공약과 연계되어, ‘인천SDGs 2021’와 시민 정책 수요의 정합성이 상당히 높은 편임.

<표 IV-11> ‘인천SDGs 2021’ 30개 세부목표 기준 제9대 인천시의회 196개 공약 연계 현황

구분	‘인천SDGs 2021’ 세부목표	공약수
경제분야	2-1. 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하고 매력있는 농어촌	2
	8-1.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 확립	16
	8-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육성정책 추진	9
	8-3. 글로벌 기업 및 물류 플랫폼 강화 및 지원	3
	9-1.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	11
	9-2.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45
	9-3.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단지 조성	9
	12-1. 지속가능산업 혁신 체계 구축	-
	8개	95
사회분야	1-1. 필수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체계	2
	3-1. 공공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보장	12
	3-2.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3
	4-1. 보편적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교육 질 및 교육 형평성 제고	17
	5-1. 여성의 지역경제 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1
	10-1.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계층 격차 최소화	6
	11-1. 원도심 내 맞춤형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10
	11-2. 지속적인 생활안전 실현	6
	11-3. 문화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예술복지 보편화	7
	16-1. 공동체 중심의 안전망 구축	4
	17-1. 민·관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거버넌스 활성화	-
	11개	68
환경분야	6-1. 안정적인 공공하수도 운영	-
	6-2. 연안과 하천의 깨끗한 수질유지를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
	7-1.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 구축	3
	7-2.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
	13-1.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구축	5
	13-2.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3
	14-1. 인천광역시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7
	14-2. 해양환경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단속 및 자연보호 활동	1
	15-1. 인천 녹지시설 활성화	6
	15-2.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8
15-3. 산림자원 관리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3	
	11개	33
합계	총 196개 공약, ‘인천SDGs 2021’ 세부목표 30개 중 25개와 연계. 연계율 83.3%	

2) ‘인천SDGs 2021’ 기준 제9대 인천시의회 공약의 특징

- 전체 공약 중 ‘9-2. 교통체계’ 관련 공약이 45개(22.9%)로 가장 많고, ‘4-1. 교육’ 17개(8.7%), ‘8-1. 지역일자리’ 16개(8.2%) 순으로 연계율이 높음.
- 분야별로 구분하면, 경제 분야 인천SDGs와 관련한 공약이 95개(48.5%)로 가장 많은 반면, 환경 분야 관련 공약은 33개(16.8%)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제개발에 대한 시민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인천발전연구원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체계’ 관련 공약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지하철 연장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광역시 면적 대비 부족한 도시철도망,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로 향하는 광역 이동의 비효율성, ▲송도·청라·영종 등 신도시 지역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불편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반영된 것임.
- 인천광역시는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S-BRT 중심의 ‘Y자형’ 대중교통망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분담률을 2030년 40%, 2035년 50%, 2040년 60%까지 끌어올릴 예정임.
- 장기적으로 승용차 이용률 감소와 대중교통 분담률 증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1차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공약과 연계되지 않은 ‘인천SDGs 2021’ 5개 세부목표를 보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시민참여기반 조성, ▲수질오염관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가 포함됨(〈표 IV-12〉).
- 한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자원안보·고령화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자원순환, 돌봄 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과 재생에너지 지역산업생태계 조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당면한 현안임.
-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것은 지역 사회 내 인천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비전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반증임.
- 관련 의제에 대해 보다 활발한 공론화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담보할 필요 있음.

〈표 IV-12〉 공약과 연계되지 않은 ‘인천SDGs 2021’ 세부목표 현황

분야	인천 SDGs 세부목표	주요내용
경제분야(1)	12-1. 지속가능산업 혁신 체계 구축	마을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분야(1)	17-1. 민·관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거버넌스 활성화	시민참여예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등
환경분야(3)	6-1. 안정적인 공공하수도 운영, 6-2. 연안과 하천의 깨끗한 수질유지를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7-2.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하수오염 관리,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3) 인천SDGs와 공약 간 연계성 분석의 한계

- ‘인천SDGs 2021’와 제9대 인천시의회 공약의 정합성이 높을 경우, ‘인천SDGs 2021’의 이행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인천SDGs 2021’의 이행 현황이 양호한 지표는 43.9%에 불과해 기대만큼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SDGs가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정책 효과를 위한 체계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의 공약 이행 성과가 ‘인천SDGs 2021’의 단기적인 이행 성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공약이 모두 정책으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공약과 인천SDGs 정합성 비율만으로 이행 성과 상관관계를 평가하기는 곤란함.
- 공약과 인천SDGs의 연계성이 인천SDGs 달성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 한편, ‘인천SDGs 2021’와 196개 공약을 연계한 목록은 ‘부록 7’에서 확인할 수 있음.



V.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체계 현황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체계 현황 및 시사점

1) 인천광역시의회 일반 운영 체계 현황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의장 및 총 6개 상임위원회(의회운영, 행정안전, 문화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 교육)와 2개 상설 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가 설치되어 활동 중임.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음.
-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운영조례 제 32조), 일반적으로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안건의 심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함.
- 지속가능발전 담당 상임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임.

[그림 V-1] 인천광역시의회 구성도



*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2)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지원 조직 체계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의정 지원조직은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사무처와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제도가 존재함.
-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는 사무처장(2급~3급, 국장급 이상), 의정정책관(3급, 국·과장급)과 3명의 담당관(소통홍보/의사/입법, 4급)으로 구성되며, 시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전문위원(4~5급)은 위원회 차원의 입법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전문위원의 정수는 지방의원 정수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의회 경우, 시의원이 총 40명이므로, 전문위원을 총 9명 이내(4급 7명, 5급 이하 2명)를 둘 수 있음⁷⁷⁾. 현재 인천광역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와 1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회별로 2명의 전문위원을 배정해 총 14명이 활동 중임⁷⁸⁾.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책지원관(6급 이하)은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담하는 실무담당자로서, 의원의 지휘·감독을 받음. 전체 의원 정수의 1/2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대 20명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명의 정책 지원관이 2명의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함. 현재 인천광역시의회는 5개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8명의 정책지원관을 두고 있음(의회운영위원회 제외).⁷⁹⁾

3) SDGs 기반 의회 운영체계 가이드라인 기준 시사점

- 세계의회의연맹(IPU)의 SDGs 기반 의회 운영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게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원회 등 전담 기구 설치·운영과 전담 인력 배치를 권고함.
-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담 기구 및 인력 모두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다음과 같은 전담 기구 및 인력 배치가 필요함:
 -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을 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통해 4년 기한의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조례안 및 정부예산안에 대한 SDGs 영향 평가 실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인천광역시 입법과제 연구,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해관계자

7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 제3항 관련)’

78)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사무처 조직현황: <https://www.icouncil.go.kr/main/parliament/organ.jsp>

79) 상동

의견 수렴 및 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

-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배치
- 다만, 전문위원 배치의 경우, 현재 인천광역시의회 전문위원 정수가 이미 <지방자치법>의 정원 규정을 초과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상임위원회’로 제한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한 ‘전문위원’ 배치가 필요함.
 -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한편, ‘정책지원관’의 경우, 위원회가 아닌 의원의 의정 활동 보좌진이기에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업무만 전담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음.

2. 인천광역시 SDGs 이행 관련 입법 현황 및 시사점

1)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현황

- ‘지속가능발전’ 관련 직접적인 조례는 총 2건으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음.
-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5년), ▲이행점검 및 평가(2년), ▲추진계획 및 평가보고서의 공표 의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30명 이내, 2년 임기), ▲지속가능발전 책임관(3급 이상) 지정, ▲관련 업무의 민관협력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협력 가능 등을 명시함.
- 인천SDGs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이행점검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시의회 의원을 배정하여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시에 시의회 참여 구조가 마련된 것은 유의미함.
- 다만, 유엔SDGs 이행점검체계 권고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함: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인천SDGs 이행 평가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속의 공론을 통한 의견수렴 체계 명시
 - 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으로 취약계층 명시(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농어민, 노동자/노조, LGBTI 등)
 - 지속가능발전 전용 포털을 통한 인천SDGs 이행 현황 및 관련 자료 정보의 상시 공개 의무 명시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평가보고서의 의회 보고 의무 명시
- 한편, 인천시의 경우, 인천SDGs 실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체계로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과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역할: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교육과 홍보,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과 정책대안 제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 구성원: 시민, 기업, 행정 분야를 각각 대표하는 3명의 공동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행정부시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시장 및 상임회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2년)으로 구분되며, 3명의 공동협의회장 중 시민대표가 상임회장을 맡아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 인천SDGs 실천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협력 체계’가 제도화 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다만, 유엔SDGs 참여 체계의 개방성·포용성·투명성·대표성·책임성 원칙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책임성] 인천SDGs 및 지표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계획의 연계 및 이행 현황 보고서 정기적인 공표 명시(협의회 사업별 성과지표 평가를 통한 인천SDGs 지표 개선 영향 평가)
 - [포용성, 대표성]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취약계층 포괄 기준 명시 및 대표성 강화(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농어민, 노동자/노조, LGBTI 등)
 - [개방성] 협의회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연동 명시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회 활동 현황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2022.12.) 및 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2023.9.) 등 추진기반 입법 활동이 있었음.
- 다만, 인천광역시의회에 입법·예산·시정감사 시 인천SDGs를 연계하거나 영향 평가를 해야 하는 조직적 체계 및 정책도구가 제도화되지 않아 다른 분야에서 인천SDGs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입법·예산·시정감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됨.⁸⁰⁾
- 또한, 인천시의회에 지속가능발전 이행 추진 체계가 부재하여 의회 차원의 정기

80) 제9대 인천시의원 인터뷰, 2026.4.

적인 포럼이나 토론회는 없었으며, 의원별로 지속가능발전 포럼이나 토론회에 초청되어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됨⁸¹⁾.

- 한편, ‘지속가능발전 광역시·도의회 네트워크’가 발족되어 광역시·도 의원간 정보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기반이 마련됨.⁸²⁾

3. 인천광역시의회 정책 연구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체계 현황

- 인천광역시의회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를 통해 의정 정책 연구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 체계를 구축함.

1) 정책연구개발 지원 체계 현황 및 과제

- 조례에 따르면, 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시정발전과 정책연구·개발, 의원입법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며, 4명 이상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의원은 최대 2개의 연구단체에 가입이 가능함.
- 자료 수집비, 회의비, 강의료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단체별 연간 500만원 이하)와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인천광역시 제9대 의회(2022.7.~2026.6.)에서는 지난 총 61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함(2023년 17개, 2024년 23개, 2025년 15개, 2026년 6개)⁸³⁾.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원연구단체는 2026년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시민참여연구회’가 처음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임.
- 지난 2022년 7월~2026년 3월까지 시의회에서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는 총 35건으로, 연간 10건의 정책연구보고서가 발간됨.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는 없음.⁸⁴⁾
-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SDGs 정책연구개발 체계는 구조적으로 지속성 및 일관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의 상설 운영 및 전문위원 배치를 통해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연구사업 방식으로 정책보고서 발간이 필요함.

2) 역량강화 지원 체계 현황 및 과제

- 시의회 의원 및 직원 교육 연수 지원 관련하여, 시의회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81) 제9대 인천시의원 인터뷰, 2026.4.

82)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83)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의원 연구 활동: <https://www.icouncil.go.kr/main/activity/2025/research01.jsp>

84)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정책연구보고서: <https://www.icouncil.go.kr/main/information/report.jsp>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사무처 직원(전문위원, 정책지원관 포함)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됨.

- 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의 경우, 국내외 연수로 구분되는데, 국내 교육연수의 경우, 의장이 해당 의회기(임기) 단위로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확정 및 시행함. 공공위탁교육, 자체교육, 민간위탁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됨.
- 지난 2023년~2025년, 3년 동안 공공위탁교육 10건, 자체교육 20건, 민간위탁교육 12건으로 총 42건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은 없었음.⁸⁵⁾
- 2022년 12월~2025년 9월까지, 해외연수는 총 27차례로 진행되었으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없었음.⁸⁶⁾
- 시의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기 교육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한국환경연구원)를 통한 공공위탁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
- 의회 사무처 직원의 역량강화는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의 교육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현재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정이 부재함.⁸⁷⁾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개설이 필요함.

85)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의원 역량강화 현황: <https://www.icouncil.go.kr/main/information/strengthen.jsp>

86)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해외교류활동: https://www.icouncil.go.kr/main/activity/trip_9th.jsp

87)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교육일정: <https://www.incheon.go.kr/hrd/HRD010201>



VI.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및
역할 과제 제안

1. 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 방안

1) 조례 개정 또는 의회 의결을 통한 ‘상설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담 인력 배치

- 상설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또는 본회의 의결
 - 개정 대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한 상설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예: 윤리특위, 예결특위)
 - 또는 제10대 인천시의회(2026.7.~2030.6.) 첫 정기회 시 2030.6월을 기한으로 하는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을 의결
 - 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조례안 및 정부예산안에 대한 SDGs 영향 평가 실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인천광역시 입법과제 연구, 지속가능발전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6개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 자문·권고
 - 구성원: 인천시의회 6개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인씩 총 7인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의제와의 구조적 연계 체계 구축
- 위원회 전담 전문 인력 배치를 위한 조례 개정
 - 개정 대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전담 전문위원 및 소정의 사무직원 배정
 - 현재 조례 상 ‘상임위원회’로 제한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제4조)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필요

2) 시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연수 체계 구축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한국환경연구원)’ 또는 지속가능발전 전문 연구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의원 대상 매년 ‘지속가능발전’ 위탁교육 추진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과정 개설·운영을 통한 의회 사무처 직원 교육 추진

3) 인천시의회 SDGs 이행 정보 포털 운영

- 현행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가칭)인천SDGs 의정 활동’ 메뉴 추가 개설 후 관련 의정활동보고서, 정책자료 및 보고서 등 정보 공개 (예: 인천SDGs 관련 입법 활동, 공약 이행률 등)

4) 정부 통계기관 및 감사기관과의 협력

- 국가데이터처 및 인천광역시 통계기관과의 협력: 국가데이터처 SDGs 통계 포털 및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담당부서(기획조정실)의 데이터에 의회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 감사관 및 시민감사관과의 협력: 정부 예산이 SDG 이행에 올바르게 쓰였는지 추적하기 위해 감사기관과 협력하여 성과 감사 보고서를 공유하고 심층 검토

5) 국제SDGs 이행점검체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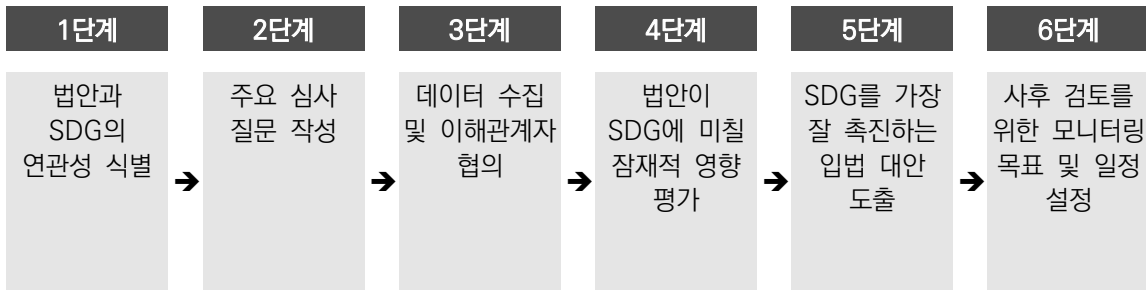
- 세계의원연맹(IPU) 주관 'SDGs 포럼'(매년 7월, 뉴욕): SDGs 관련 의회 활동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인천시의회 SDGs 의정 활동 공유 등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고위급 정치포럼(매년 7월, 뉴욕),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발전포럼(매년 2월, 방콕), 동북아 SDGs 이해관계자포럼(매년 10월 중): SDGs 관련 정부 및 이해관계자 활동 국제 동향 파악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2. 의회 기능별 역할 방안

1) 입법: 조례 제정 이전과 이후 'SDGs 기반 입법 심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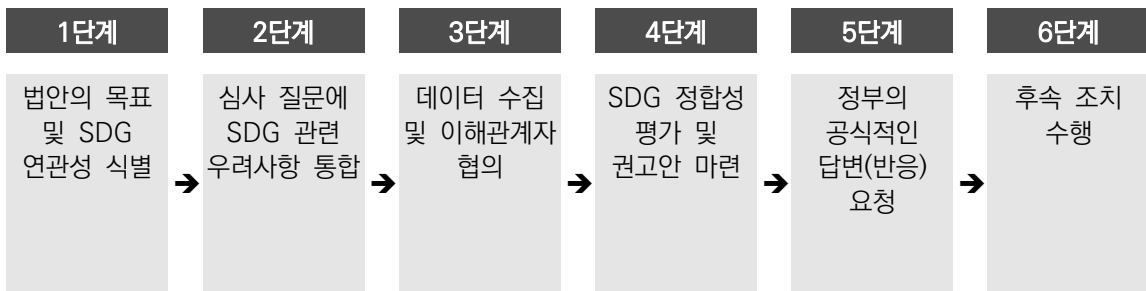
- 법안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또한 SDGs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잠재적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려
- 조례 제정 전 심사는 법안이 채택되기 전에 그 초안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써, 이 절차의 주된 목적은 법안 초안이 양질인지, 그리고 의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규제 목표의 타당성, 규제 방안의 적절성, 예상되는 결과, 규제로 영향을 받는 주요 대상층 파악, 그리고 법안 문안의 구조와 품질 등을 검토. 또한 해당 법안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
- 입법 이후에는 그 효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 세계의회연맹(IPU)이 권고한 입법 이전 및 이후 SDGs 기반 6단계 심사 절차 활용 필요

[그림 VI-1] SDGs 기반 입법 이전 6단계 심사 절차



※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표 III-4> 참조

[그림 VI-2] SDGs 기반 입법 이후 6단계 심사 절차



※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표 III-5> 참조

2) 예산: 정부 예산안에 대한 ‘SDGs 연계 예산’ 분석

- 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유엔의 ‘SDGs 연계 예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정부 예산안이 인천SDGs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SDGs 달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
- 정부 예산의 SDGs 영향 분석은 인천시의회의 예결특위 전문위원을 통해 진행하거나 인천광역시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SDGs 연계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3) 행정 감독: ‘인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인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입장문서 발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년 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 현황 보고를 의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인천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평가 및 후속 조치 요청 내용을 담은 입장문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응답을 받는 체계를 시행
-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담당 가능

- 한편, 인천SDGs 세부목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시정 질의를 통해 행정부서별 이행을 촉진

4) 대의: ‘(가칭)인천SDGs 의정 포럼’ 등 공론장 마련

- ‘(가칭)인천SDGs 의정 포럼’ 등 공론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인천 내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시민들과의 소통·협의 채널 마련
- 지속가능발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나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대의 활동 일환으로 추진하거나, 의원연구단체 차원에서 진행 가능

3. 2026-2030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안)

1) 인천광역시의회 SDGs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과제

- ① 의사규칙 개정
 - 법안이나 예산안이 의회에 도입될 때 해당 법안이 SDG 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SDG 영향 분석(SDG Impact Analysis)'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의사규칙을 개정
- ② <인천광역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
 - 상설 ‘(가칭)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 ③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개정
 -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전담 전문위원 및 소정의 사무직원 배정
- ④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개정
 - 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으로 취약계층 명시(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농어민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5년) 및 평가(2년) 시 ‘이해관계집단 참여 속의 공론체계 구축·운영’ 의무화
 - 지속가능발전 전용 포털을 통한 인천SDGs 이행 현황 및 관련 자료 정보의 상시 공개 의무 명시
 -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평가보고서의 의회 보고 의무 명시
- 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유엔SDGs 및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9조 2항에 따른 속의공론원칙(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대표성, 책무성)에 근거하여 협의회 위원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차 및 방법, 권한 및 책무 명시

- 인천SDGs 연계 협의회 실천사업 계획 수립 및 이행 보고서 공표 의무 명시

2) ‘인천SDGs 정책과제(2026-2030)’ 추진 및 ‘Post 2030 의제’ 대응

입법 과제 도출 정책연구 추진

- 소관 위원회 차원에서 정기적인 SDGs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이슈 동향 정책 브리핑 발행(분기별 또는 반기별)
- ‘SDGs 기반 법안 심사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개발
- ‘SDGs 영향평가 툴(Tool)’ 개발
- ‘SDGs 기반 예산서 가이드라인’ 개발

3) ‘(가칭)인천SDGs 의정 포럼’ 구성 및 운영

- 소관 위원회가 연 1~2회 정기적으로 주최하여 인천SDGs 이행 관련 정부, 이해관계자들간 소통·협업의 공론장을 마련
- 또는 의원연구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집단들과 함께 포럼 공동 개최 추진 가능

4) ‘(가칭)지속가능발전 지방의회네트워크’ 적극 참여

- 2025년 발족한 ‘지속가능발전 광역시·도의회 네트워크’(사무국: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의원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전국적인 유엔SDGs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SDGs 이행 입법, 예산, 감독, 대의 역할 가능



VII. 부록

1. 참고문헌 및 자료

[문헌자료]

- 김판석·사득환 (1999)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4호, pp. 71-88
- 문태훈, (2002), '한국의 지방의제21에 대한 평가', 지방의제21과 WSSD 전국포럼, 2022.7.12~13, 자료집
- 백범석·박진아, (2020), '발전, 인권 그리고 국제법-발전권의 국제적 논의 전개와 실현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65권 제2호(통권 제157호), pp.59-92
- 윤경호 (2025) '2030 유엔SDGs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2025 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 2025.7.4. 자료집
- 이주영, (2017),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제2호, pp.33-57
- 인천광역시 (2020) 제2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2021-2040)
- 인천광역시 (2025) 2025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 인천광역시 (2025) 제3차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2026-2045)
- 민영은 (2026.3.17) '2026년 ESG 공시 의무화 동향과 시사점 고찰', 삼성SDS,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esg-disclosure-trends-and-implications.html>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국회ESG포럼 소식, <https://unglobalcompact.kr/activity/%EA%B5%AD%ED%9A%8Cesg%ED%8F%AC%EB%9F%BC/%EA%B5%AD%ED%9A%8Cesg%ED%8F%AC%EB%9F%BC-%EC%86%8C%EC%8B%9D/?mod=document&uid=3215>, 2026-03-27 방문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024)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기후변화 특별보고관 임명 공지, <https://www.ohchr.org/en/specialprocedures/sr-climate-change> 2026-03-16 방문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25.10.29., '동북아 포럼에서 에너지 전환 관련 중, 러, 몽 정부와 시민사회간 입장 대립해', <https://sdgforum.org/240>
- Barcelona Provincial Council (2025) Voluntary Local Review
- Constanze Fetting (2021) Parliamentary Mechanis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 Global Organization of Parliamentarians Against Corruption (GOPAC),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slamic Development Bank (IDB) (2017) Parliament's Role in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Parliamentary Handbook
- Inter-Parliamentary Union (2016) Parliamen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 self-assessment toolkit
- Inter-Parliamentary Union (2021) Guidelines for parliamentarians on budgeting for the SDGs: Making the most of public resources
- Inter-Parliamentary Union (2025) SDG-informed legislative scrutiny: A Toolkit for Parliamentarians
- Sachs, J.D., Lafortune, G., Fuller, G., Iablonski, G. (2025).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to 2030 and Mid-Century.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5.
Paris: SDSN, Dublin: Dublin University Press. DOI: <https://doi.org/10.25546/111909>

- Surabaya City (2021) Voluntary Local Review
-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 UNDESA (2019) Principles of Effective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www.un.org/ssr/sites/www.un.org.ssr/files/news_articles/_principles_of_effective_governance_for_sustainable_development.pdf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881.php, 2026-03-26 방문
-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https://open.assembly.go.kr/portal/mainPage.do>
-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국회의원 연구단체, <https://open.assembly.go.kr/portal/infs/cont/infsContPage.do?infsId=IWA0021747D35167>, 2026-3-26 방문
-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국회의원 연구단체 등록현황, <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O78HKE0010099W15881>, 2026-03-26 방문
-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https://icleikorea.org/>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www.sdkorea.org/contents/local/sustainability_local.php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CO, 2026-03-26 방문
-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SDG-Human Rights Data Explorer, <https://sdgdata.humanrights.dk/en/sdg/report/country/954>
- UNDESA, SDG Localization and the Voluntary Local Reviews, <https://sdgs.un.org/topics/voluntary-local-reviews>
- UN SDGs portal: <https://sdgs.un.org/>
- UN SDGs Portal, Inputs to the HLPF, <https://hlpf.un.org/inputs>
- UN SDGs Portal, 이해관계자 참여, <https://hlpf.un.org/mgos>
- UNOHCHR, <https://www.ohchr.org/en/good-governance/about-good-governance>
- Wikipedia, Politics of Germany,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Germany, 2026-03-26 방문
- Wikipedia, Politics of Indonesia,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Indonesia, 2026-03-26 방문.
- Wikipedia, Politics of Tunisia,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Tunisia, 2026-03-26 방문
- Wikipedia, Politics of Italy,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Italy,

2026-03-26 방문

- Wikipedia, Politics of Spain,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Spain, 2026-03-26 방문
- Wikipedia, Politics of South Africa,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South_Africa, 2026-03-26 방문
- Wikipedia, Politics of France,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France, 2026-03-26 방문
- Wikipedia, Politics of Austria, https://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Austria, 2026-03-26 방문

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유엔SDGs 연계 현황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유엔 SDGs
1.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전략1.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1.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국조실)	16.b
		2.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 강화(국방부)	16.5/16.6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법무부)	16.3
		4.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경찰청)	16.3
		5.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감사원)	16.5/16.6
		6.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법무부)	16.3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방통위)	16.6/16.10
		8.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인권위)	16.1
	전략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국조실)	16.7
		10.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행안부)	16.5/16.6
		11.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보훈부)	16.5/16.6
		12.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보훈부)	16.5/16.6
	전략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3.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인사처)	16.5
		14.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	16.7
		15.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국조실)	16.7/17.14/17.15/17.17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권익위)	16.5
		17.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기재부)	16.6
		18.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기재부)	16.6
		19. 민생, 안전과 공정, 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국조실)	16.6
2.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전략1. AI 3대 강국 도약	20.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과기정통부)	9.1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과기정통부)	8.2/9.c
		22. 초격차 AI 선도기술, 인재 확보(과기정통부)	9.5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과기정통부)	9.2
		24. 세계1위 AI 정부 실현(행안부)	16.6/16.7/16.10
	전략2. 기가탄탄한 과학기술	25.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개인정보위)	16.1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과기정통부)	9.1
		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과기정통부)	9.5
	전략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과기정통부)	9.5
		29.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산업부)	9.1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산업부)	8.2/9.4
		31. 미래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국토부)	11.3
		32. 의료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	9.b
		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 수출 활성화(기재부)	8.2/9.b
		34. 제3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중기부)	8.3/9.3
		35.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중기부)	8.3/9.3
	전략4.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36. 경제, 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국조실)	9.b
		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산업부)	17.10/17.13
		38.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산업부)	7.1/9.1
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산업부)		7.2/9.1	
40.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		13.2	
41.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산업부)		13.2	
42.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환경부)		8.4/12.1/12.2/12.5/12.6/12.7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환경부)		13.1	
44.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환경부)		15.1	
45.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환경부)		6.6/15.4/15.5	
전략5.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46.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금융위)	8.10/10.5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금융위)	10.5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금융위)	9.b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유엔 SDGs
3.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전략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49.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행안부, 국토부)	11.a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국토부, 행복청)	11.a
		51.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국토부, 산업부)	11.a
		5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행안부)	16.7
		53.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행안부, 기재부)	17.1
		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행안부)	11.a
		55.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교육부)	4.5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해수부)	11.a
	57.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국토부)	11.2	
	전략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금융위)	8.10/10.5
		59.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금융위)	9.3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기재부)	10.4
		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중기부)	8.9
		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국토부)	11.1
		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국토부)	11.1
	전략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64.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	16.5/16.6/16.b
65.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 행위 근절(공정위)		12.6/16.5/16.6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금융위)		12.6/16.5/16.6	
전략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67. 기술 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중기부)	16.5/16.6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농식품부)	2.1/2.3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농식품부)	2.3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농식품부)	2.3/7.2	
	71. 어촌, 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 해양산업 혁신(해수부)	2.1/2.3/14.7/14.b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전략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행안부)	1.5/11.b/13.1
		73.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응 강화(행안부)	1.5/11.b/13.1
		74.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강화(법무부, 경찰청)	16.1/16.2/16.3/16.a
		75.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고용부)	8.7/8.8/10.7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해수부)	14.1/14.2/14.3/14.4/14.7/14.a/14.c
	전략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복지부)	1.2/1.3/1.4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 돌봄(복지부)	5.4
		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복지부)	10.2
		80.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농식품부)	-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기재부)	8.2/8.3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 소득 형성(금융위)		10.3/10.4	
전략3.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83.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로 전환(복지부)	3.8	
	84.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복지부)	3.8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복지부)	3.8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3.8	
전략4.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87.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육아 환경 조성(복지부)	3.1/3.2/3.7/5.4	
	88.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여가부)	4a/5.1/5.2/5.4/5a/10.3/16.2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국조실)	10.2/16.7	
	90.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복지부)	1.2/1.3	
	91.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복지부)	1.3/10.3/10.4	
	92.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고용부)	8.2/8.3/8.5/8.8/10.7	
전략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고용부)	8.5/8.7/8.8/10.3/10.7	
	94. 노동 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고용부)	8.5/8.7/8.8	
	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고용부)	8.5/8.7/8.8	
	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 정책(고용부)	8.3	
전략6. 내 삶에 기회를 주는 성평등	97.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여가부)	5.1/5.5/5.c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여가부)	2.2/3.1/3.7/5.2	

국정목표	추진전략	국정과제	유엔 SDGs
5.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전략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99.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교육부)	4.3/4.4/4.b
		100.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교육부)	4.7
		10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교육부)	4.1/4.2/4.3/4.5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교육부)	4.a
	전략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03.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문체부)	11.4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문체부)	11.4
		105.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문체부)	11.4
		106.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문체부)	3.4
		107.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문체부)	8.9/11.4
		108.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방통위)	9.1/9.c
	전략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109.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국방부)	-
		110.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국방부)	-
		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국방부)	-
		112.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국방부)	-
	전략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113. K-방산 육성 및 획득 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방산청)	-
		114.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 제도화(통일부)	16.1/16.a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통일부)	16.1/16.a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통일부)	16.1/16.a
117. 국민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 추진(통일부)		16.1/16.a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통일부)		16.a	
전략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외교부)	17.6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외교부)	17.2/17.6/17.9/17.10/ 17.13/17.16/17.17	
	121. 경제 안보,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외교부)	17.16	
	122.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외교부)	16.1/16.a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외교부, 동포청)	-	

3. SDGs 이행을 위한 의회 자체 역량 평가 질문 예시

구분	질문 예시
질문 1: 의회 내 SDG에 대한 이해 증진	<p>A: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가 치러진 후, 신임 의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 • 의원들은 국내 및 국제적인 SDG 이행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정보 제공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의원들은 SDG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제 및 지역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의원들이 SDG에 관한 교육 세션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몇 차례의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몇 명의 의원(남성 및 여성)이 참여했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션이나 인식 제고 활동이 조직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몇 차례였으며, 몇 명의 직원(남성 및 여성)이 참여했는가? 이들은 어느 부서 소속이었던가? <p>B: 노력의 영향에 대한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접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도서관은 의원들에게 SDG 관련 브리핑과 분석을 제공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 ☞ 의원들은 시민사회단체, 싱크탱크, 학술 기관, 개발 협력 파트너 또는 기타 SDG 전문가들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데 개방적인가? ☞ 의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가 연락 창구(예: 국가 지속가능개발위원회)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연락하여 의원들에게 SDG에 관한 브리핑이나 교육 세션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 의원들이 SDG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나 구조(예: SDG 관련 의회 실무 그룹, 의원 모임 또는 태스크포스)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 효과는 어떠한가? • MDG(새천년개발목표)(또는 보다 일반적인 빈곤 퇴치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과거 노력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가 수행된 적이 있는가? 의회가 이를 활용하여 모범 사례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DG와 연계하기 위해 사용된 의회 메커니즘과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된 적이 있는가?
질문 2: SDGs를 글로벌 차원에서 지역 차원으로 확대하기	<p>A: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해당 계획과 기존 부문별 계획(기후, 교육, 보건 등) 간에 연계가 이루어졌는가? • 의회가 국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는가? • 의회가 국가적 우선순위를 논의하기 위해 국내 SDG 이행에 관한 토론(본회의 또는 관련 부문 위원회)을 개최했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가? ☞ SDG 이행에 관해 의회에서 장관 성명을 발표했는가? ☞ SDG 목표 및 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는가? 해당 데이터는 성별, 연령, 지역 분포 및 기타 관련 특성별로 세분화되어 있는가? <p>B: 노력의 영향에 대한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SDG 국가 계획 수립에 어느 정도 관여해 왔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SDG 계획이 없는 경우, 의회가 참여를 모색해야 할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된 SDG 또는 부문별 계획 수립 과정이 있는가? ☞ 의원들이 이러한 계획 수립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과 정보가 필요한가? • 의회와 정부는 SDG와 관련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조정 또는 기획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부처, 태스크포스, 실무그룹, 담당 부서 등)이 있으며, 의회가 해당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가? ☞ 정부는 SDG 이행에 있어 어느 정도까지 의회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가? ☞ 지속가능발전 문제에 관한 정부 태스크포스에 의회가 참여한 선례가 있어 의회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질문 3: 의회 기구 내 SDG 주류화	<p>A: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가 2030의제와 SDGs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는가?(예: 동의안이나 결의안을 통해) • 의회가 SDG 이행 및 모니터링 지원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적절히 명시한 제도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 의회가 자체 조직 내에서 SDG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배정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가 SDG 관련 업무를 조정할 책임을 기존 의회 기구 또는 조직에 부여했는가? 그렇다면 어느 기구인가? ☞ SDG가 하나 이상의 위원회의 공식적 권한 범위에 포함되었는가? 그렇다면 어느 위원회인가?

구분	질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가 SDG 전담 위원회를 신설했는가? ☞ SDG에 중점을 둔 비공식적인 초당적 기구가 있는가?(예: 의원 모임, 관심 그룹) <p>지난 12개월 동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해 몇 차례의 본회의 토론을 진행했는가? ☞ 어떤 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논의했는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하여 몇 건의 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었는가? <p>B: 노력의 영향에 대한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의회의 상·하원 위원회에서 SDG 이행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의회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SDG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가? ☞ 각 의회 위원회는 어떤 목표와 세부 목표를 다뤄야 하며, 어떻게 다룰지 파악했는가? 그렇다면, 해당 위원회가 SDG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양원의 여러 위원회가 SDG 감독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논의했는가? ☞ 위원회에는 SDG 활동을 반영한 업무 계획이 있는가? • 의회 위원회는 SDG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위원회는 관련 장관에게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국가 SDG 전략 또는 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의회 위원회는 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가? • 의회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국제 개발 파트너 또는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위원회는 이러한 단체들을 공개 청문회에 초청하거나, SDG 이행에 대한 참여 현황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의회 위원회 및/또는 그 직원들은 SDG 관련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브리핑을 제공하거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단체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는가? • SDGs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공적으로 주류화되었는가? 의회가 SDGs와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 • 의회 사무국은 의원들과 위원회의 SDGs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가?
<p>질문 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p>	<p>A: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 개혁을 파악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 초안에 SDGs 이행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가 첨부되어 있는가? ☞ 법안이 제출될 때, 제안된 법안이 관련 SDGs에 미칠 영향을 명시한 설명서가 함께 제출되는가? 법안을 소개하는 장관 연설에서 일반적으로 제안된 법안이 SDGs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여부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법안은 몇 건인가? ☞ SDGs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개정안은 몇 건인가? 이 중 몇 건이 채택되었는가? <p>B: 노력의 영향에 대한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법안 초안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위원회 절차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위원회는 실제 SDG 이행 문제와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가? ☞ 의회 위원회는 SDG 이행(효과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포함)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가? • 위원회나 유사 기구가 SDG 관점에서 법안 초안에 대한 “영향 평가”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된 법안에 대한 성별 영향 평가를 수행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제안된 법안의 인권 영향 평가 및 비준된 인권 협약과 유엔 인권 기구의 관련 권고 사항 모두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의회에 제공되는 지원은 얼마나 효과적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인력 규모로 의원 및 위원회에 필요한 입법 연구, SDG 영향 분석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 ☞ 의회가 입법 과정에서 SDG를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나 정보가 필요한가?

구분	질문 예시
<p>질문 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재원 조달</p>	<p>A: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예산안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하고 있는가? 의회가 정부에 이를 의무화하고 있는가? • 예산에 SDGs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이 배정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예산의 몇 퍼센트가 배정되었으며, 그 용도는 무엇인가? • 해당 국가는 SDGs 지원을 위해 국제 개발 자금을 수령하거나 제공하고 있는가? • 예산 및 재정 위원회의 업무 범위(Terms of Reference)에 감독 활동의 일환으로 SDG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의회 사무처 내에 의회 위원회가 제안된 예산 및 실제 예산 지출을 SDG와 대조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역량을 갖춘 예산 담당 부서나 조직이 있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가의 최고 감사 기관 또는 유사 기관이 의회에 제출한 SDG 관련 보고서는 몇 건인가? ☞ 관련 위원회의 보고서 중 SDGs와 관련된 자금 배정이나 지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보고서는 몇 건인가? <p>B: 노력의 영향에 대한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예산을 논의하고 승인할 때 SDGs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자체적인 결론을 바탕으로 정부에 수정안을 권고하거나 예산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 의회는 예산 지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이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가? ☞ SDG에 대한 예산 지원이 미흡한 경우, 의회나 그 산하 위원회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정부에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가? • 의회는 SDG 지원을 위한 국제 개발 자금 조달을 감독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민간(NGO, 재단 등) 출처의 대외 원조가 국가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 이러한 자금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국가 개발 협력 계획 (일반적으로 “원조 정책”이라고도 함)이 존재하는가? ☞ 정부는 해당 계획의 이행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가? ☞ 국제 개발 파트너와의 국제 차관이나 협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에 상정되어야 하는가? • 예산처나 의회 사무국은 예산에 대한 젠더 감사나 인권 관점에서 본 예산 분석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감사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가? ☞ 의회가 이러한 감사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는가?
<p>질문 6: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현황 모니터링</p>	<p>A: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진척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 해당 국가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에 참여하여 SDGs 이행과 관련된 추가 조치에 대한 국제적 권고를 받았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와 관련된 위원회 청문회가 몇 차례 열렸는가? ☞ SDGs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의회 질의는 몇 건이었나? ☞ SDGs와 관련된 조사는 몇 건 수행되었나? <p>B: 노력의 영향에 대한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정부가 SDG 이행 및/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작성한 진척 보고서나 기타 관련 문서를 어느 정도 검토하고, 논의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가 진척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했는가? ☞ 이러한 보고서가 추가 논의를 위해 의회 위원회에 회부되는가? ☞ 지속가능발전 및/또는 SDG 관련 문제에 대한 의회의 권고 사항이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의회는 글로벌 기구, 특히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모니터링 기구에 제출된 보고서가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가? ☞ 이러한 보고서가 보다 상세한 심의를 위해 의회 위원회(예: 외교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 위원회)로 회부되고 있는가? ☞ 국제기구가 정부에 SDG 이행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할 때, 해당 권고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검토, 토론 및/또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구분	질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SDG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자체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정부의 SDG 관련 프로그램이나 정책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가? ☞ 이러한 의회 조사는 실제 SDG 이행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대중이나 외부 전문가와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있는가? ☞ 이러한 조사가 종료되면 공식 보고서가 작성되는가? 그렇다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실제로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는가?(예: 의회 도서관이나 의회 웹사이트에) ☞ 의회는 이러한 조사 권고 사항을 반영하도록 정부 및/또는 SDG 담당 부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정부가 해외개발원조의 '공여국'이든 '수혜국'이든 간에, 의회가 정부의 개발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개발원조의 지출 또는 수령에 관한 연례 보고서가 본회의나 위원회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되고 있는가? • 의회가 정부의 국제 개발 파트너(즉, 양자 원조국, 지역 기구 및 다자간 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국제 개발 파트너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가? ☞ 국제 개발 파트너가 SDG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브리핑을 하도록 초청되는가?
<p>질문 7: 대중과의 소통</p>	<p>A: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에 관한 전국적인 대중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가? 의회가 이에 참여하고 있는가? • 의회는 SDGs에 대해 정기적인 대중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는가? SDGs와 관련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내에서 또는 의회가 주최한 SDGs 관련 공개 행사가 몇 건이나 개최되었는가? ☞ SDGs에 초점을 맞춘 대외 활동이나 지역구 방문은 몇 건이었나? <p>B: 노력의 영향에 대한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신의 활동을 대중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SDG 관련 사안에 대해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 의회 웹사이트는 의회의 SDG 관련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의회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SDG 관련 활동을 알리고 있는가? • 의회는 SDGs 또는 개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어느 정도 만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들이 SDG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중과 만나고자 할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사무국은 어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의회 전반에 걸쳐 체계화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의회 위원회는 SDG 이행 현황과 SDG 관련 프로그램이 지역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위원회는 현장 방문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권한 및/또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 의회 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실시할 경우,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예: 여성, 청년, 빈곤층)과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p>질문 8: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SDGs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보장</p>	<p>A: 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에서는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면, 소외 계층/취약 계층은 몇 개나 되는가? 이들은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들을 파악하는 데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 • 국가 목표와 지표가 대표성이 부족한 계층, 소외 계층 및 취약 계층을 고려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가 이러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가 의회에 제공되고 있는가? • 의회 내에서 이러한 집단(예: 여성, 청년, 원주민, 장애인, 소수민족 또는 문화적 소수자)은 어떻게 대표되고 있는가? • 국가 SDG 이행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소외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법적, 정책적 또는 프로그램적 필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 • 의회는 SDG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예: 의회 위원회 또는 현장 방문 시)에 소수 계층 및 소외 계층을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지난 12개월 동안:

구분	질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권리와 요구를 주제로 한 의회 토론은 몇 건이었나? ☞ 취약계층 또는 소외계층 대표들과 함께 진행된 청문회는 몇 건이었나? <p>B: 노력의 영향에 대한 성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이행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하기 위해 의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취약 계층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국내 취약 계층의 주요 주장 및 요구 사항, 그리고 취약 계층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주요 과제(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가? ☞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SDG 이행 상황을 검토할 때 이러한 정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 • 의회는 의회 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도입했는가? 어떤 의회 메커니즘이 다양성 증진에 성공적이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회에서 일하도록 장려하거나, 반대로 이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는 의회 내 구성원 중 소수 계층 및 소외 계층의 대표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해당 계층 출신으로 의회 내 책임직이나 의사결정 직책을 맡고 있는 인원의 수를 포함하는가? •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관련 의회 절차에 소수 계층이나 소외 계층의 목소리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다른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는가?(예: 비의원들을 의회 위원회에 위촉하거나, 소외 계층 구성원들을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 등)

4. 유엔SDGs와 '인천SDGs 2026' 연계 현황표

분야	유엔 SDGs	핵심키워드	'인천SDGs 2026'
경제	2.3	농가소득	2-1. 안전한 먹거리와 자원생산체계 안정화
	2.4	친환경농업	
	7.2	재생가능에너지	7-1.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노력
	7.3	에너지효율	8-1.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구축으로 경제성장과 혁신 도모
	8.1	GDP성장률	
	8.3	기업활성화	8-1.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구축으로 경제성장과 혁신 도모
	8.5	완전고용/동일노동 동일임금	8-1.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 구축으로 경제성장과 혁신 도모
	8.6	청년고용	
	8.9	지속가능관광	9-1. 지역 인프라 기반 산업성장과 도시경제 선순환
	9.1	기반시설	
	9.2	기반시설	9-2. 산업혁신을 위한 미래산업 생태계기반 구축
	9.4	친환경산업	7-1.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의 노력
	9.5	연구개발	9-1. 지역 인프라 기반 산업성장과 도시경제 선순환
	12.7	공공조달	12-1. 지속가능한 생산소비환경 구축
12.b	지속가능관광		
사회	1.2	상대빈곤	1-1.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안정망 강화
	1.3	사회안전망	10-1. 지역내 사회적 소외 방지 및 상호 존중감 향상
	1.4	경제적 자립지원	1-1.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및 복지안정망 강화
	1.5	재난대응	
	2.1	식량접근성	2-1. 안전한 먹거리와 자원생산 체계 안정화
	3.3	전염성질병	3-1.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관리 지원 및 개인 사람 돌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3.4	비전염성질병	
	3.7	생식보건	
	3.8	보건의료서비스	
	3.b	필수의약품 접근성	4-1.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양질의 교육
	4.2	유아교육	
	4.7	평생교육/SD교육	5-1. 양성평등 확대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
	5.5	여성리더십	
	5.c	성평등정책	6-1. 공평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운영
	6.2	위생	10-1. 지역내 사회적 소외 방지 및 상호 존중감 향상
	10.2	포용(경제)	
	10.7	이민정책	11-1. 인천환경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제고
	11.1	주거	
	11.2	교통	11-1. 인천환경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제고
11.5	재난대응		
환경	6.3	하수처리	6-1. 공평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운영
	6.4	물이용효율	6-2.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수질관리
	6.6	담수생태계	6-1. 공평하고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운영
	11.6	환경오염	6-2. 수질오염 사전예방과 효율적인 수질관리
	11.7	녹지공간	15-1. 육상생태계 보호 및 보전
	12.3	식품폐기물	13-1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12.5	자원재활용	
	13.1	재난대응	2-1. 안전한 먹거리와 자원생산 체계 안정화
	13.2	기후정책	13-1.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14.1	해양폐기물	14-1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보호
	14.2	연안생태계	
	14.5	해양보호구역	
	15.2	산림조성	15-1. 육상생태계 보호 및 보전
	15.3	토양황폐화	
	15.4	산림보호	15-1. 육상생태계 보호 및 보전
15.5	멸종위기종		
거버 년스/ 이행 수단	16.1	형사범죄	11-1. 인천환경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제고
	16.2	아동범죄	10-1. 지역내 사회적 소외 방지 및 상호 존중감 향상
	16.5	부정부패	16-1. 적극행정 활성화 및 행정 투명성 제고
	16.6	행정제도	
	16.7	참여제도	
	16.10	정보접근성/기본권보장	
	17.17	민관파트너십	17-1. 협력적 거버넌스 환경 확대 구축
합계	총 59개, 경제 15개, 사회 20개, 환경 16개, 거버넌스/이행수단 6개		

5.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개 원칙 기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분석

범주	원칙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시사점
효과성 (Effective ness)	1. 역량 (Compe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책임관 (담당부서: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2. 건전한 정책 수립 (Sound policy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조(목적)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인천광역시민들은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수립한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이 인천광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는지 점검 필요
	3. 협력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행정 관계자, 위촉직으로 시민단체와 학계·경제계·시의회 소속 1인, 인천지속협 추천 1인 등 소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가 필요시 속의공론장 운영을 위해 지역 단체/기관과 협력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 검토 속의공론장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위원회 심의 과정에 반영, 그 반영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명시(예:광주광역시 기본조례 참조)
책임성 (Account ability)	4. 청렴성 (Integ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렴의무 서약서 작성 	(위촉, 회의 참여시 작성)
	5. 투명성 (Transpar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록 공개 의무 없음 정보공개 플랫폼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록 공개 및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조항 신설 검토 필요
	6. 독립적 감독 (Independent oversight)	-	-
포용성 (Inclusive ness)	7.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eaving no one behind)	해당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구성 시 인천의 인구학적 특성 고려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시 시각장애인 활용도 제고
	8.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해당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조례에 인권기반 SDGs 실천방안 모색 명기(또는 목적 조항 변경)
포용성 (Inclusive ness)	9. 참여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위원장 2명(시장과 민간위원 1인)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위촉(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장애유무, 이주 여부, 연령 등을 고려한 위원 구성 필요
	10. 보충성 (Subsidia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계획 수립(5년마다) 시 지속가능성 평가(2년마다), 시장에게 제출 후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 의회 보고,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에 제출 필요
	11. 세대 간 형평성 (Intergenerational equity)	해당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구성시 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위원 위촉 필요

6.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11개 원칙 기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규정, 인사규정, 복무관리 규정 분석 내용

범주	원칙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운영규정, 인사규정, 복무관리규정	시사점
효과성 (Effectiveness)	1. 역량 (Compe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조례 제1조(목적)에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인 추진 명기 	-
	2. 건전한 정책 수립 (Sound policy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조례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에 역할 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협 활동과 유엔 SDG와 통합성 확인 어려움, 사업과 유엔 SDGs를 연계하는 보고체계 마련 필요
	3. 협력 (Collab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별 협력 단위 확장 등 네트워크 점검 필요
책임성 (Accountability)	4. 청렴성 (Integ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무관리 규정 제8조(청렴) 	-
	5. 투명성 (Transpar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를 통한 활동 내용 공개 운영규정 등 각종 규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등 공개 필요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활동 자료 탑재, 검색 용이 등)
	6. 독립적 감독 (Independent overs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회계감사와 사업감사 진행 	-
포용성 (Inclusiveness)	7.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Leaving no one beh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 모집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 가능 운영위원회, 사무처의 초청으로 참여 가능(운영위원회, 사무처의 목적의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규정에 포용성 원칙 명기 하고,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구성 시 적용하도록 강제 필요
	8.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관련 조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규정과 인사규정에 차별금지 원칙 조항 신설 검토 필요
	9. 참여 (Particip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기업, 행정 분야별 각1명의 공동협의회장을 포함한 150명 이내 위원 운영위원과 분과위원 공개 모집 (인천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과 분과위원 명단 공개 및 모집처 확대
	10. 보충성 (Subsidiarity)	해당내용 없음	-
	11. 세대 간 형평성 (Intergenerational equity)	해당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시 세대간 형평성 고려한 위원 위촉

7. '인천SDGs 2021'과 제9대 인천시의회 공약 연계 목록

1) 경제 분야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정책과제
2.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어촌	2-1. 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하고 매력있는 농어촌	농촌기반시설 구축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공익수당(연 60만 원) 지원(강화군)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국민의힘)
		친환경인증농산물재배면적	
		로컬푸드 매장 수	
		친환경농산물 인증건수	
		어가인구수	
어촌뉴딜 300사업 달성률			
8.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경제도시	8-1.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 확립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월 50만 원) 지원 및 취업 지원(미추홀구) 청년창업 일자리지원센터 건립(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 연계 일자리 10만 개 창출(계양구) 실버 창업 지원수당 신설(부평구) 실버 일자리 지원(서구) 로봇랜드 활용 청년 창업 지원(서구) 어르신 공공일자리 3,000개로 확대(동구) 노인 일자리 확대(계양구) 일용근로자 복지관 건립(서구) 노인·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남동구) 일자리 약 30만개 창출(더불어민주당) 청년 공공일자리, 스타트업 창업율 확대(더불어민주당) 어르신 일자리·공공일자리, 돌봄 참여 등 확충(더불어민주당) 청년 창업 랩 등 앵커시설 유치(국민의힘)
		일자리 창출 목표	
		실업률	
		고용률	
		청년고용 프로그램 예산비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비정규직 평균연봉	
		산업재해율	
	8-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및 육성정책 추진	중소기업 사업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산업(항공·IT·BT) 유치(계양구) IT 기업 유치(미추홀구) 부평11번가 내 '부평청년창업 사관학교' 개설(부평구) 스마트 디지털 시티 구축(미추홀구)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기술혁신형 일자리 창출(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바이오/AI/MRO등), 미래 신성장산업 일자리 인재 육성(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및 인증비용 지원, 해외박람회 지원확대(더불어민주당)
		창업 기업수	
		GRDP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	
		창업생태계 인프라 구축 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수	
	8-3. 글로벌 기업 및 물류 플랫폼 강화 및 지원	글로벌 행사 유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종, 항공정비단지(MRO) 조성(국민의힘) 공항경제권 완성(국민의힘) 청라, 수소에너지·로봇산업 클러스터(국민의힘)
		공항 이용 증가율	
항만 이용 증가율			
9. 선순환 구조를 가진 지속가능한 산업도시	9-1.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경제	인천e음 대상 확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대적 지원 및 골목형 상점가 지원(계양구) 야간경제 라이프-존 조성(계양구) 인천형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지원(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자금 1조 원 조성(미추홀구)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남동구)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정책 마련(남동구) 소상공인 회복 지원(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부평구)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변 상권 활성화(서구) 소상공인/서민 금융서비스/대학생 학자금/신혼부부 주택자금 등 금융소외 계층 지원 강화(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적극 지원(더불어민주당)
		자활사업 참여자 수	
		소상공인 자금 지원액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정책과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반체계 구축	12-1. 지속가능산업 혁신 체계 구축	1,000인당 사회적경제 기업수	-
		사회적기업 인증수(사업체 10만개 당)	
		사회적기업 매출액	
		사회적경제 고용규모	
		지속가능한 공공물품 구매 비율	

2) 사회 분야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정책과제	
1.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구축	1-1. 필수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노인 버스 무료 승차(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밖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지원(더불어민주당) 	
		1,000인당 사회복지 시설수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대상자 비율		
		노인취업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3. 시민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체계 실현	3-1. 공공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한 삶의 질 보장	저소득층 생활보장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미추홀구) 치매안심요양병원 설립(동구) 어르신 헬스케어 실현(서구) 의료전문대학원 설립(서구) 영종 국립대병원 유치(중구) 경로당 주치의 사업 및 노후 물품 교체 지원(부평구) 거동 불편한 어르신 방문진료 (취약계층, 정기진료) 치매 전문 돌봄 확대(더불어민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확대 운영(더불어민주당) 인천 제2의료원 설립추진·국립대의대 설립 추진(더불어민주당) 제2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국민의힘) 	
		아동 환경성질환 유병률-천식, 아토피		
		등록 장애인 비율		
		1000명당 공공보건의료 인력 수		
	3-2.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구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 예방 및 돌봄 체계 구축(계양구) 백신 무료 접종(미추홀구) 어르신 순환진료버스 운영(미추홀구)
		청소년 비만율		
		생활습관유병률-고혈압, 당뇨병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		
		우울증 유병률		
		10만 명당 자살률		
결핵발생환자 수				
4. 지역발전을 창조하는 인재양성 도시 구축	4-1. 보편적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한 교육 질 및 교육 형평성 제고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및 교복 지원(부평구) 중·고등학교 확충(서구) 어린이 행복센터 건립(서구) 만 3~4세 무상교육 실시(부평구) 다함께돌봄센터 및 인천형 어린이집 확충(부평구) 용정 배움누리 건설(미추홀구) 여자고등학교 유치(미추홀구) 구월2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남동구) AI 교육 기반 조성(남동구) 중·고교 교복 무상 공급(계양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양구) 여중 초교 통합학교 신설(동구) 전국 최초 0세~12세 완전무상돌봄, 0세~5세 완전무상보육(더불어민주당) 국공립어린이집, 24시간 긴급돌봄, 아이사랑 꿈터 등을 확대(더불어민주당) 지역간 교육환경 불균형 해소(더불어민주당) 초중고 노후냉난방기, 노후화장실, 석면 전면교체(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취약아동 온라인 무료 학습 시행(더불어민주당)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법정 감염병(1급,2급,3급) 발생률		
		공공도서관 온오프라인 방문자 수 및 신규등록자 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공공보육시설 비율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이용 비율		
		학교 내 청소년 동아리 수		
		평생교육 참여율(평생교육 사업예산 비중)		
5. 여성의 사회참여	5-1. 여성의 지역경제 참여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더불어민주당) 	
		성별영향평가 수행정책 비율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정책과제	
및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여성고용률		
10. 계층 간 불평등해소를 통한 지역공동체 구현	10-1.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계층 격차 최소화	독거노인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 신축(강화군)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남동구) 무상교통 확대(강화군) 청년 월세 지원(부평구)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더불어민주당) 소외계층 대상 희망드림장학금, 환경장학금 신설 등 맞춤형 장학금 확대(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주택 비율		
		장애인 고용률(공무원)		
		다문화지원센터 이용인구 비율		
		1,000인당 요보호 아동 발생 건수		
11.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도시 구현	11-1. 원도심 내 맞춤형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신주 지중화 및 폐·공사 정비(중구) 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미추홀구) 원도심 재생 가속화(미추홀구) 구월동·남촌동·만수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남동구) 부개·일신·산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주거환경 정비(부평구)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강화군)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내 집 마련이 쉬운 인천 실현(더불어민주당) 검단신도시·계양신도시 등 신도시의 지속적인 발굴·조성(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추가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달성(더불어민주당) 청년주택, 청년 월세를 지원(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사업예산		
		빈집(폐공간) 정비 비율		
		주택 노후도		
	11-2. 지속적인 생활안전 실현	1,000인당 자동차사고 사상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종경찰서 조기 설립(중구)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지원(미추홀구) CCTV 사각지대 해소(남동구) 여성·노약자 안심귀가 서비스(남동구) Safety Zone 구축(부평구) 인천고등법원 및 북부지원 설치 지원(국민의힘) 	
		1,000인당 범죄발생 건수		
		재난재해-피해건수		
		재난재해-피해자수		
		재난재해-피해액		
	11-3. 문화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예술복지 보편화	인천시 등록 문화예술단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립 실내 수영장 및 탁구 체육관 건립(서구) 아시아드 경기장 체육공간 조성(서구) 공연콘텐츠 개발·보급 및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더불어민주당) 공공·스마트도서관·생활문화센터 확충(더불어민주당)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유치(더불어민주당)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통한 지역거점 여가 공간 활용(더불어민주당) 부평 캠프마켓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국민의힘) 	
		10,000인당 공공도서관 수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개최 건수 및 10만명 당 공연 건수		
	16. 시민이 주인되는 소통 행정도시 구축	16-1. 공동체 중심의 안전망 구축	집단민원 발생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수6동 복합청사 신축(남동구) 부평5동·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평구) 작전동·서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양구) 인천 전역 시민 안전 하게 CCTV 확대 설치(더불어민주당)
			민원서비스 만족도	
			원본 정보공개 비율	
정보공개 청구 건수				
마을공동체 조직화 모임 건수				
자원봉사 참여율				
공공기관 청렴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17.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17-1. 민·관 협력체계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참여예산 비율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		
		행정운영경비 비율		

3) 환경 분야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정책과제
6.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	6-1. 안정적인 공공하수도 운영	대연평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질 TMS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물관리 인식증진 사업	
		한강하구통합물관리 체계 구축	

목표	세부목표	지표	정책과제
	6-2. 연안과 하천의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수질오염원 관리	수질오염원 관리	-
		과학적 수질감시 체계구축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오염총량관리사업	
7.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구축	7-1.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에너지 소비량 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자립 신도시 구축(계양구) 친환경 교통 지원 확대(더불어민주당) 수소차, 전기차 충전·정비 복합단지 조성(더불어민주당)
		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공동주택 등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지원사업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	
		전기승용차	
7-2. 신재생 에너지 생산 확대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	
	태양광에너지 참여건수		
	풍력에너지 발전량		
13. 기후변화 대응 종합 안전예방 대책 수립	13-1.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구축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남동구) 방음벽(터널) 설치(남동구) 악취 저감 시설 강화(동구) 청라 소각장 이전 추진, 악취·미세먼지 해결(서구) 미세먼지 ZERO! 소음 ZERO!(더불어민주당)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	
		온실가스 총 배출량	
		공공부문 온실가스감축실적	
	13-2.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자원순환형 사회	미세먼지 평균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매립지 조기 종료(서구) 최첨단 기술 도입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 제로화(더불어민주당) 상가·일반주택가 분리배출 집하시설 확대 조성(더불어민주당)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4. 청정한 해양환경 및 생태친화적 자원 조성	14-1. 인천광역시 전해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연안습지(갯벌) 면적 변동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안산책로 조성(동구) 바다, 갯벌, 역사문화, 휴양 등 인친형 섬 들레길 '바다이음길' 조성(더불어민주당) 소래습지공원 국가정원으로 조성(국민의힘) 경인01라벨길 등 해양 친수공간 조성 확대(국민의힘) 인천내항 등 원도심 재개발 적극 지원(국민의힘) 내항 친수공간화 조기 추진(국민의힘) 부평 연안부두트램, 제물포 연안부두트램, 영종트램 등 조기 추진(국민의힘)
		레저문화 프로그램 수	
		해양레저 이용객 수	
	14-2. 해양환경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 폐기물 단속 및 자연보호 활동	해양폐기물 배출 단속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줄이고 바다환경 살리고, 해양쓰레기 제로화(더불어민주당)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 건수	
		저어새 개체 수(미래지표)(마리)	
15.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도시	15-1. 인천 녹지시설 활성화	도시공원(숲) 조성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생태 탐방로 및 검단 생태 벨트 조성(서구) 군부대 이전 부지 연계 대규모 녹지(무장애 숲길) 조성(부평구) 캠프마켓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부평구) 수봉공원 고도제한 완화 및 대형 테마파크 조성(미추홀구) 인천 연안부두-서울 한강, 경인고속도로 구간 상부 숲길 조성(더불어민주당) 미집행 공원, 도시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권 녹지 등 도심숲 조성(더불어민주당)
		1인당 도시공원(숲) 조성면적	
		옥상녹화 설치 건수	
	15-2.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하천복원비율(미래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계양구) 굴포천·아라뱃길 수변 레저 활성화(계양구) 만수천 복개 해체 및 물길 복원(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정원)화 추진(남동구) 검단천 생태화(서구) 굴포천 물길 복원 및 생태하천 관리(부평구) 청라 호수공원 경관 개선(서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 및 승기천 복원 추진(더불어민주당)
		2급수 이상 하천 비율	
	15-3. 산림자원 관리 및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마산 들레길 및 계양산 야간경관 조성(계양구) 오류왕길동 백석산 공원 및 가족공원 조성(서구) 문학산 전망대 정비(미추홀구)
산림훼손 면적			
산림 휴양시설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임야 지역 면적	

8. 표적집단 면접 질문지

1) 공통질문

- 개인 기본정보(이름, 소속, 직책, 지속가능발전 업무 경력)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정도
 - ① [역사]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역사 40년을 설명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인천의 지속가능발전 역사 30년을 설명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인천 지속가능발전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 ② [지속가능발전 개념] ▲17개 유엔SDGs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인천 SDGs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 ③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2) 문헌분석결과 교차 검증

① 인천 지속가능성 평가의 현실 반영 정도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 지속가능성(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4개 분야 중 잘 되고 있는 분야, 잘 안 되고 있는 분야는? 그 이유는?
- 2025 인천지속가능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제)사회)환경)제도행정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긍하는가?, 수긍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 인천지속가능성 평가 결과가 인천광역시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는가? 5점 만점 기준 평점을 준다면?
- 반영이 잘 안된다고 본다면(3점 이하) 그 이유는?

② 2026-2030 인천SDGs 세부목표 및 지표의 현실 적합성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력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그 이유는?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 지속가능성 OO분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 인천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또는 인천의 현안을 고려할 때, 최근 수립된 인천SDGs의 세부목표가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가? 기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 인천SDGs 세부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 인천SDGs 세부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③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의 효율성, 효과성

- 개인적인 경험상 현재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정부)가 인천 지속가능성 개선에 효율적,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지? 5점 만점 기준을 몇점으로 평가할 것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 (3점 이하) 그 이유는?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SDGs 이행점검체계의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 개인적인 경험상 현재 인천SDGs 이행에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지? 5점 만점 기준으로 몇점인지, 효과적이지 않다면(3점 이하) 그 이유는?
- 개인적인 경험상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④ 인천시의회 역할 효과성

- 지난 30년 동안 인천SDGs 이행 추진 시 인천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가?
-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입법, 예산, 감독, 대의 활동 관련 인천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인천SDGs 이행을 위한 시의회의 조례제정, 예산승인 과정에서 시의원 개인, 행정부서, 인천지속협, 시민사회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⑤ 기타

- 2030년까지 주력해야 할 인천SDGs 세부목표 및 지표(우선순위 3가지)
- 2030년까지 개선해야 할 이행점검체계(우선순위 3가지)
- 인천시의회의 역할 과제(우선순위 3가지)

SDGs 이행과 지방의회 역할: 인천시의회 중심 실행방안 연구

발행년도 | 2026. 5.

연구책임자 | 윤경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연구원 | 박차옥경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연구수행기간 |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성산동 249-10)

대표번호 | 02)325-6179

이메일 | kicsd.re.kr@gmail.com